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시사점

이민규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시사점**



연구책임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기대심리’·‘반중 정서’ 반영한 ‘문제해결 중심’의 도시외교 실시해야

한중 양국 간 비약적인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심화돼

1992년 수교이래, 한중 양국은 상이한 정치·안보 체제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경제협력과 인문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한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1년 약 3,015억 달러로 1992년 대비 약 47배 증가하였고, 방문자 수는 2016년 약 1,284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양국 고위급 간 소통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022년 6월 말 기준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총 47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하지만 양국 간 전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반중 정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한국 내 대중국 이미지는 급속히 악화된다. 구글 트렌드 웹검색 결과, 최근 5년 ‘한중관계’ 대비 ‘반중’ 키워드 관심도(최고 빈도 기준, 반중:한중관계=100:59)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결과 역시 ‘반중’ 검색량이 2022년 9월 ‘70’까지 치솟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2002년 66.0%에서 2021년 22.0%로 하락한다.

한중관계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 상호 불일치, 교류·협력 추진동력 상실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실질적 한중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 간에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칭화대학교 한중관계 지수와 호감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호중, 미중, 일중 관계는 호감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에 반해, 한중관계 지수는 2017년 9월 3.3까지 하락은 하지만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화’(0~3) 이하 척도로 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편, 사건계수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중관계 평화지수를 살펴보아도, 김영삼

집권 시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평화지수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집권 시기를 제외하고 김대중 집권 시기부터 줄곧 44.03~44.87구간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중국 평화지수가 중국의 대한국 평화지수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실질적 관계' 대비 악화된 '인식'은 한중관계를 왜곡시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발전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우호적인 대중국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국내 정치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 22%까지 지속 하락, 중국을 점차 '경계 대상'으로 인식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 2015년 61.0%까지 회복하지만 2021년 다시 22.0%까지 하락한다.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미국과 EU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20년 기준 러시아에 대한 인식보다도 부정적이다. 한국인의 낮은 대중국 호감도는 대륙별로 비교해 보아도 심각한 수준이다. 북유럽, 서유럽, 북미 지역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비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인식은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중국을 '경쟁 대상'에서 점차 '경계 대상'(2007년 31.0%→2021년 51.8%)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이 4.8%p 감소한 것에 반해 '적대 대상'은 7.5%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눈여겨볼 부문은 4강 국가 중 한국인은 미국만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중국의 역할 기대했지만, '북한 편향적' 정책에 실망해

2010년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가 22.0%까지 하락하는 데 영향을 끼친 외교·안보 이슈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한중 간 이슈는 아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국이 보인 '북한 편향적인 입장'으로 인해 수교 당시 품었던 중국의 전향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

화를 위협하는 국가 중 중국을 선택한 비율과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 시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한 비율 모두 증가한다. 2015년 61.0%까지 회복되었던 대중국 호감도가 2021년 22.0%까지 다시 하락하는 데 영향을 끼친 외교·안보 이슈는 복합적이다. 2016년에 발생한 사드배치 이슈가 결정적이었지만, 이어도 이슈를 포함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단 침입, 불법 조업, 중국의 해양 영토분쟁 등이 ‘악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발생한 외교·안보 이슈들에 의해,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이 악화되었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기대 심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질적 이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조정(혹은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제4차 북핵 실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경제발전에 기대감 높지만 정치체제와 리더십에 대해선 부정적 태도 보여

한국인들은 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 이슈에 대해 다소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6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중간 경제 마찰이 대중국 인식에 미친 영향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발전모델 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인은 중국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산혁명과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더해 티베트와 신장지역 인권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국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답변이 2021년 7.0%에 불과할 정도이다. 셋째, 중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악화에 ‘치명타’를 안긴다. 2021년 관련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는 가장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 1위로 꼽히게 된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정치체제와 발전모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중국 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0%가 2030년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고(미국 78.0%), 2022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55.0%가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미국 32.0%).

한중 역사·문화 동질성 외려 갈등 유발해··사회·문화 교류로 협력 기반 마련해야

한중 양국 간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협력의 촉매제가 아닌 갈등 요인으로 등장한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교류가 양국 국민 간 인문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악화에 처음이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은 2003년과 2006년에 발생한 동북공정 이슈이다. 2009년까지 특별한 외교·안보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호감도가 41.0%까지 하락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문제는 동북공정 이슈는 정부 간 구두 합의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 이후 매년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 귀속권 문제이자 글로벌 문화표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한국인의 뇌리에 ‘각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교감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실질적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0년과 2022년 중국 생활 경험이 있는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중국 경험 이후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비율이 높아졌고, 여러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 역시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문제 해결 중심’의 분야별 전문화된 정책 수립 필요해

무너진 한중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대중국 도시외교 추진동력을 재차 얻기 위해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두 가지 관점에서 도시외교 6대 어젠다별 전문적인 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6대 어젠다 중 ‘평화구축’과 ‘경제·식량’은 ‘기대심리’가 더욱 내포된 분야로 협력 강화(‘평화구축’은 교류 모색)가 추진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외교 형태로는 각각 (다자)공공외교와 (양자)경제외교가 될 수 있다. 그 외 ‘환경’, ‘보건·의료’, ‘인권’, ‘문화’ 어젠다는 모두 ‘반중 정서’의 원인이 되는 분야로 문제 해결 중심의 도시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어젠다별 집중해야 할 외교 형태로 ‘환경’은 (다자)환경외교, ‘보건·의료’는 (다자)위기외교, ‘인권’은 (다자)공공외교 그리고 ‘문화’는 (양자)시민외교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들 외교 형태를 중심으로 성질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겠다.

목차

| | |
|------------------------------------|-----------|
| 01 연구개요 | 2 |
| 1_연구배경 및 목적 | 2 |
| 2_연구내용 및 방법 | 8 |
| 02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와 한중관계 인식 | 16 |
| 1_대중국 호감도와 상대적 인식 | 16 |
| 2_한중관계 판단과 상대적 인식 | 23 |
| 03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요인 | 28 |
| 1_외교·안보 분야 주요 사건과 대중국 인식 영향 | 28 |
| 2_정치·경제 분야 주요 사건과 대중국 인식 영향 | 34 |
| 3_사회·문화 분야 주요 사건과 대중국 인식 영향 | 41 |
| 04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정책적 시사점 | 48 |
| 1_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와 ‘실망’의 복합적 이미지와 특징 | 48 |
| 2_대중국 도시외교 시사점 | 51 |
| 참고문헌 | 57 |
| Abstract | 61 |

표 목차

| | |
|--|----|
| [표 1-1] 중국과 주요 국가 양자관계 지수와 호감도 상관관계 | 5 |
| [표 1-2] 집권 시기별 한중 평화지수 현황 | 6 |
| [표 3-1] 한중 간 대표적인 역사·문화 갈등 사례 | 43 |
| [표 4-1] 시기별·분야별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 변화 추이와 지속성 | 49 |
| [표 4-2] 시기별·분야별 한국인의 '반중 정서' 요인과 지속성 | 50 |
| [표 4-3] 신외교 행위 주체, 분야 그리고 성질별 특징 |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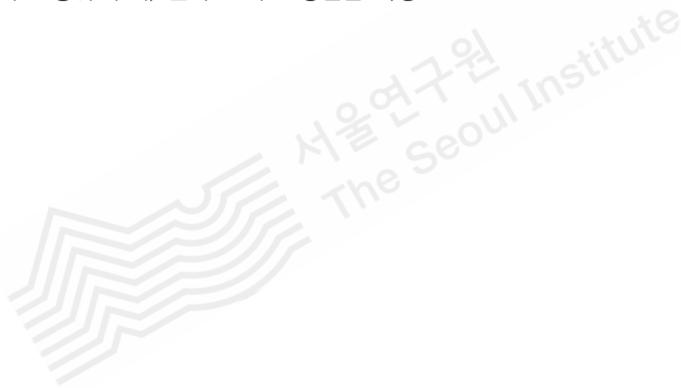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한중수교 30년 교류·협력 현황 | 3 |
| [그림 1-2] 한중관계와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 4 |
| [그림 1-3] 주요 연구 변수와 논리적 구조 간략도 | 7 |
| [그림 1-4] 한중 외교·안보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 | 10 |
| [그림 1-5] 한중 정치·경제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 | 11 |
| [그림 1-6] 한중 사회·문화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 | 12 |
| [그림 2-1] 한국인의 주요국 호감도 추이 | 16 |
| [그림 2-2] 한국과 러시아·동유럽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 17 |
| [그림 2-3] 한국과 북·서·남유럽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 18 |
| [그림 2-4]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 19 |
| [그림 2-5]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 20 |
| [그림 2-6]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 21 |
| [그림 2-7] 한국과 중동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 22 |
| [그림 2-8] 한국인의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추이 | 23 |
| [그림 2-9] 한국인의 4강 관계에 대한 인식 추이 | 25 |
| [그림 3-1] 한국인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 29 |
| [그림 3-2] 한국인의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대중국 인식 추이 | 32 |
| [그림 3-3] 한국인의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 35 |
| [그림 3-4] 한국인의 주요국 지도자에 대한 인식 추이 | 36 |
| [그림 3-5] 한국인의 중국 인권 정책과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 37 |
| [그림 3-6] 한국인의 중국 환경·전염병 정책과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 38 |
| [그림 3-7] 한국인의 향후 초강대국에 대한 판단과 인식 변화 추이 | 40 |
| [그림 3-8] 한국인의 주요 사회·문화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 42 |

| | |
|--|----|
| [그림 4-1] 도시외교 기본구조와 구성요소 | 51 |
| [그림 4-2] 도시외교 메커니즘 | 52 |
| [그림 4-3] 6대 어젠다별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추진 방향과 외교 형태 | 54 |



01

연구개요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1.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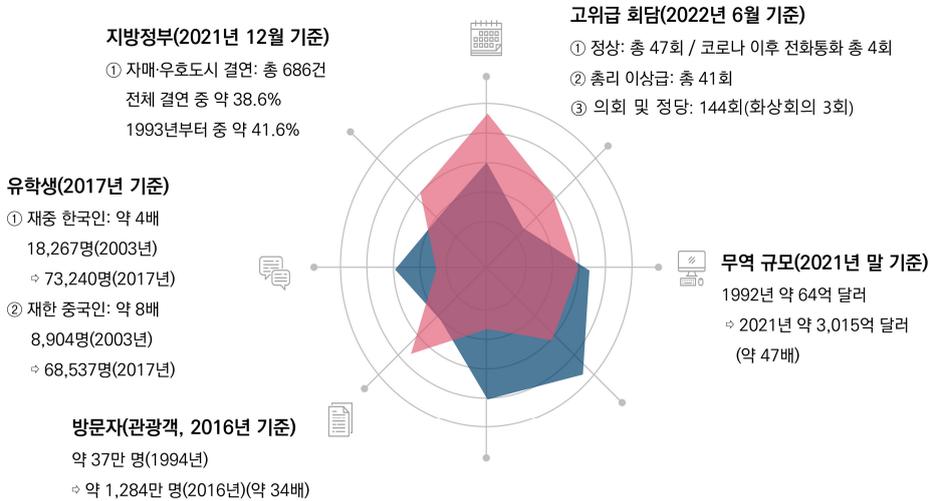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은 상이한 정치·안보 체제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경제협력과 인문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한다.¹⁾ 냉전 시기 적대 관계였던 양국은 수교 10년 만에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全面合作伙伴关系)로 발전하고,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战略合作伙伴关系)로까지 격상된다.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 교역규모는 1992년 약 64억 달러에서 2021년 약 3,015억 달러로 약 47배 증가하고, 방문자 수 역시 2016년 역대 최고치인 약 1,284만 명(1994년 약 37.5만 명 대비 약 34배 증가)을 기록한다. 이러한 급속한 교류 확대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자유주의 기반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한중 양국 고위급 간 활발한 인적교류와 정기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6월 말 기준, 1992년 9월부터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총 47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총리급 회담 역시 총 41회 성사되는 등 고위급 간 교류는 지속성을 보인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양국 의회 및 정당 간 소통과 상호 방문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코로나19 기간 3차례 화상회의 포함 총 144회).²⁾

1) 이 연구는 이민규, 2023, “무너진 기대심리: 한국인의 반중 정서 요인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21호, pp.177~218,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를 수정·발전시킨 것임을 밝힘.

2) 이민규·박은현, 2021, 「한중관계 30년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pp.9~12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교류 현황을 업데이트함.



[그림 1-1] 한중수교 30년 교류·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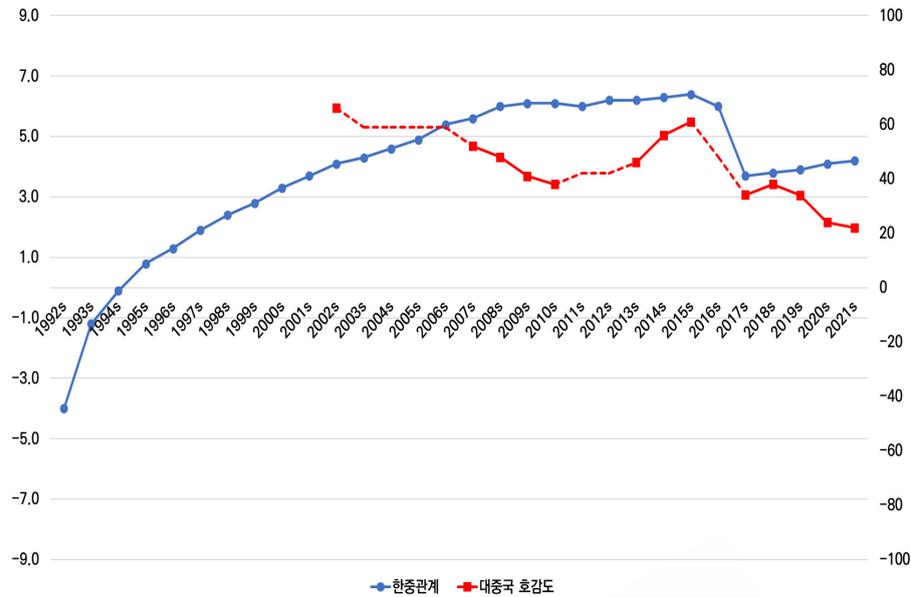
자료: 이민규·박은현, 2021, 「한중관계 30년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pp.9~12 바탕으로 최신 자료 업데이트함.

한중 양국 간 정치에서 사회·문화까지 전 분야에서 비약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중 정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한국 내 중국에 대한 이미지(image)는 급속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구글 트렌드 웹검색 결과, ‘한중관계’ 대비 ‘반중’ 키워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고 빈도 기준, 반중:한중관계=100:59).³⁾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검사 결과 역시 ‘반중’ 검색량은 2016년 1월에서 2021년 말까지 15 미만(2017년 제외) 수준을 보이다가 2022년 2월 9일 70까지 치솟는다.⁴⁾ 실제로 2021년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대중국 이미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2년 66.0%에서 2021년 22.0%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⁵⁾

3) <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Google Trends 홈페이지). 뉴스 검색은 같은 기간 반중:한중관계=94:100의 관심도를 보임. 분석이 가능한 2004년부터 살펴보면, ‘반중’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5년 5월이고, 반중:한중관계=100:86의 관심도를 보임.

4)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한 상대적 값을 의미.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Search.naver>(NAVER DataLab 홈페이지).

5)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그림 1-2] 한중관계와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http://www.tuiir.tsinghua.edu.cn/kycg/zwgxsj.htm>(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지난 30년 한중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석 불가능한 현상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기와 조정기를 거쳐 갈등기에 접어들었고,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⁶⁾ 특히, 표면화된 미중 패권 경쟁과 6차례 북핵 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외부 구조와 변수의 영향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미중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등 한중관계가 미중관계에 '종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⁷⁾ 외부 구조 변화와 변수의 부각으로 인해 양자 차원의 질적 성장, 내실화가 정착되기 전에 취약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그 결과로, 국가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연성안보 이슈에서 경성안보 이슈로 변화되고 있고, 향후 협력 요소보다 갈등 요소가 더 많

6) 김한권, 2022, "한중 외교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37,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정재호, 2021, 「생존의 기로: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274.

7) 이민규, 2020,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선 한중관계", 이희옥·강수정 책임편집,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한·중 학계의 시각」, 서울: 도서출판 선인, p.100.

8) 이동률, 2017, "정치외교", 성균중국어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25년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36.

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부정적 의견으로 수렴되고 있다.⁹⁾

[표 1-1] 중국과 주요 국가 양자관계 지수와 호감도 상관관계

| 국가 | 상관관계 | 국가 | 상관관계 |
|-------|-----------|-------|-----------|
| 한국-중국 | 0.2776 | 호주-중국 | 0.7852*** |
| 미국-중국 | 0.7955*** | 일본-중국 | 0.7011*** |

주: *는 $p < 0.05$, **는 $p < 0.01$, ***는 $p < 0.001$ 을 의미함.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http://www.tuiir.tsinghua.edu.cn/kycg/zwgxsj.htm>(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 홈페이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문제는 이상의 한중관계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평가와 ‘빛바랜 장밋빛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양국 관계 ‘현황’과 ‘인식’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양국 교류·협력 현황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지수화한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아도 실제 양국 관계보다 인식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칭화대학교의 한중관계 지수에 의하면, 2017년 9월 3.3까지 하락하지만 ‘양호’(良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중국 호감도가 22.0%까지 떨어지는 와중에도 ‘불화’(不和, 0~-3) 이하 척도(9~-9)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향은 유사한 대중국 호감도를 보이는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 등과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하다.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도 2005년 43.0%(2006년 52.0%)에서 2021년 20.0%로 급감한다. 이 기간 미중관계 역시 2021년 1월 -8.3으로 ‘보통’(普通, 0~3)의 관계에서 ‘대항’(对抗, -6~-9) 수준까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호주 같은 경우도 대중국 호감도가 2017년 64.0%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15.0%(2021년 21.0%)로 급락하게 되는데, 호중관계 역시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우호’(友好, 6~9)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년 10월부터 ‘불화’ 수준으로 급속히 악화된다. 일본의 경우 또한 일중관계 지수와 호감도 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관계와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 간에만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⁰⁾

9) 이회욱, 2020, “한중수교 25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이회욱·강수정 책임편집,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한·중 학계의 시각」, 서울: 도서출판 선인, p.18; 조영남, 2022, “한·중관계 30년의 분석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27,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10)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http://www.tuiir.tsinghua.edu.cn/kycg/zwgxsj.htm>(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 홈페이지) 데이터 분석.

‘객관적’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중관계 평화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건계수자료(GDELТ)를 바탕으로 한중관계 평화지수를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국 평화지수는 김영삼 집권 시기 52.39에서 문재인 집권 시기 44.61로 7.78p가 빠지지만, 노무현 집권 시기 46.68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대중 집권 시기부터 계속 44.03~44.87구간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대한국 평화지수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협력’과 ‘분쟁’의 관점에서 측정한 양국 평화지수는 지난 30년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표 1-2] 참조).¹¹⁾

[표 1-2] 집권 시기별 한중 평화지수 현황

| 집권 시기 | 한국의 대중국 평화지수 | 중국의 대한국 평화지수 |
|----------------------------|--------------|--------------|
| 박정희(1979.01~1979.10: 11개월) | 80.13 (1) | 56.55 (1) |
| 전두환(1980.09~1988.02: 91개월) | 72.56 (3) | 44.46 (7) |
| 노태우(1988.03~1993.02: 60개월) | 75.03 (2) | 53.54 (2) |
| 김영삼(1993.03~1998.02: 60개월) | 52.39 (4) | 47.09 (4) |
| 김대중(1998.03~2003.02: 60개월) | 44.87 (6) | 44.86 (6) |
| 노무현(2003.03~2008.02: 60개월) | 46.68 (5) | 47.61 (3) |
| 이명박(2008.03~2013.02: 60개월) | 44.03 (9) | 43.73 (8) |
| 박근혜(2013.03~2017.03: 49개월) | 44.83 (7) | 44.92 (5) |
| 문재인(2017.05~2022.05: 61개월) | 44.61 (8) | 43.36 (9) |
| 전체기간(512개월) 평균 | 54.81 | 45.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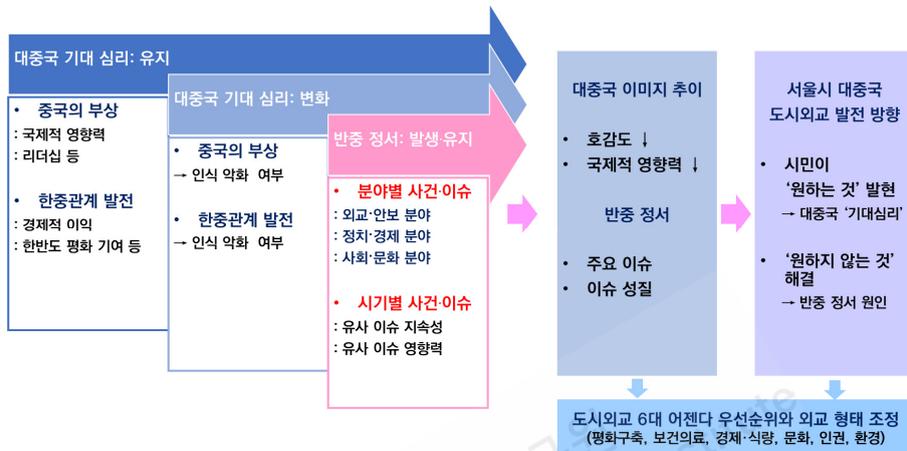
자료: 이성우, 2022, “사건계수자료(GDELТ)를 활용한 한·중 양자관계 역학 분석”, 『아태연구』, 29권 3호, p.58,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이상의 ‘실질적 관계’ 대비 악화된 ‘인식’은 한편으론 한중관계를 왜곡시켜 대중 외교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관련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양국 관계 발전의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우호적인 대중 외교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가 국내 정치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조직 해체 등 영향을 받은 상황이다.

11) 이성우, 2022, “사건계수자료(GDELТ)를 활용한 한·중 양자관계 역학 분석”, 『아태연구』, 29권 3호, p.58,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GDELТ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한중관계의 감정지수를 분석한 유사 연구는 이희정, 2022, “미중갈등과 한중관계 분석(2011-2020)-GDELТ 빅데이터 기반 시계열 분석-”, 『중국학연구』, 99집, pp.149~151, 중국학연구회 참고.

2) 연구목적

한중 양국은 사드배치 이슈로 ‘무너진’ 신뢰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숙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더 멀어지고 작아진 관계 회복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살려야 하는 시점이다.



[그림 1-3] 주요 연구 변수와 논리적 구조 간략도

자료: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① 한국인이 중국에 ‘원하는 것’과 ②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③ 대중국(도시)외교 어젠다의 ‘선후경중’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 지난 30년 한중 양국 간에 발생한 분야별 이슈와 문제를 개괄 정리하고, ② 이슈와 문제의 영향력과 ‘지속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며, ③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끼친 영향과 ‘각인’ 여부 분석을 통해, ④ 한국 국민의 ‘입장’과 ‘원하는 것’이 반영된, 즉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외교 정책 방향성과 핵심 어젠다를 살펴보고자 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제1장은 연구개요로 연구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연구배경에서는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 간 전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과 양국 관계 ‘현황’과 ‘인식’ 간에 큰 갭이 존재한다는 문제 등을 제기한다. 연구목적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목적과 함께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 목적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같은 경우는 주요 변수와 영역별 분석 대상 그리고 분석 시기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와 한중관계 인식 변화를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대중국 호감도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미국, EU,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와 비교분석하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동유럽, 북·서·남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 대륙별·국가별 대중국 호감도와 종적·횡적 비교 분석한다.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은 ‘협력’, ‘경쟁’, ‘경계’, ‘적대’ 네 가지 지표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한미, 한일 그리고 한러 관계에 대한 인식과 추가적인 비교분석을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요인을 세 가지 분야에서 살펴본다. 수교 당시 품었던 ‘기대감’의 유지 여부, 영향을 끼친 사건과 유사 사건의 발생 여부와 ‘인식’이 형성되었는지 등을 검증 및 분석한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방공식별 구역 설정과 무단 침입, 사드배치 등이 대중국 인식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1999~2005년 사이에 발생한 마늘 분쟁, 납꽃계 분쟁 그리고 김치 분쟁과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보복에 더해 리더십, 인권, 환경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이슈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동북공정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역사·문화 갈등들의 영향과 지속성 등이 검토된다.

제4장은 마지막 장으로 한국인의 대중국 복합적 인식을 정리하고,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측면에서 서울시의 대중국 도시외교 추진 방향과 외교형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도시외교 기본 메커니즘과 6대 어젠다 그리고 6대 어젠다와 한중 갈등 이슈 간의 관련성 등을 제시하게 된다.

2) 연구방법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특히 ‘기대심리’ 유지 여부와 ‘반중 정서’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한다.

첫째, 국가이미지의 한 축인 ‘감정’(emotion)과 ‘정서’(affect) 요인을 기준으로 ‘인지’(cognition)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국 내 ‘반중 정서’는 특정인의 대중국 인식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집단적 현상이자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볼딩(K. E. Boulding)이 구분한 ‘일반인’(the ordinary)의 ‘타자 이미지’(images of other)에 해당한다.¹²⁾ 이미지 이론(image theory)을 포함한 국제정치심리학 발달 과정에서 ‘차가운’(cold) 인지 대비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뜨거운’(hot) 요인 작용 및 ‘문화’(culture) 영향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³⁾ 하지만, ‘반중 정서’라는 감정과 정서뿐만 아니라, 사건 영향력의 지속성 여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이미지의 ‘지각적 패턴의 이성적 유형’(ideal types of perceptual patterns)까지는 아니지만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 특징 유무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⁴⁾

둘째, 분야별 특정 사건과 이슈가 한국 내 ‘반중 정서’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호감도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2003년부터 2010년 전후로 대중국 호감도가 66.0%에서 38.0%까지 하락하는 기간이다. 소위 말하는 한중관계의 ‘제1 전환점’에서 ‘제2 전환점’까지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¹⁵⁾ 두 번째 시기는 2016년 전후에서 2021년까지로 대중국 호감도가 다시금 61.0%에서 22.0%까지 급락하는 기간이다.

셋째,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악화를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관계는 우상향하다가 횡보 후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 역시 60.0% 이상을 유지하다가 급락 그리고 회복 후 재차 급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즉, 수교 당시와 ‘우호 협력기’ 동안 중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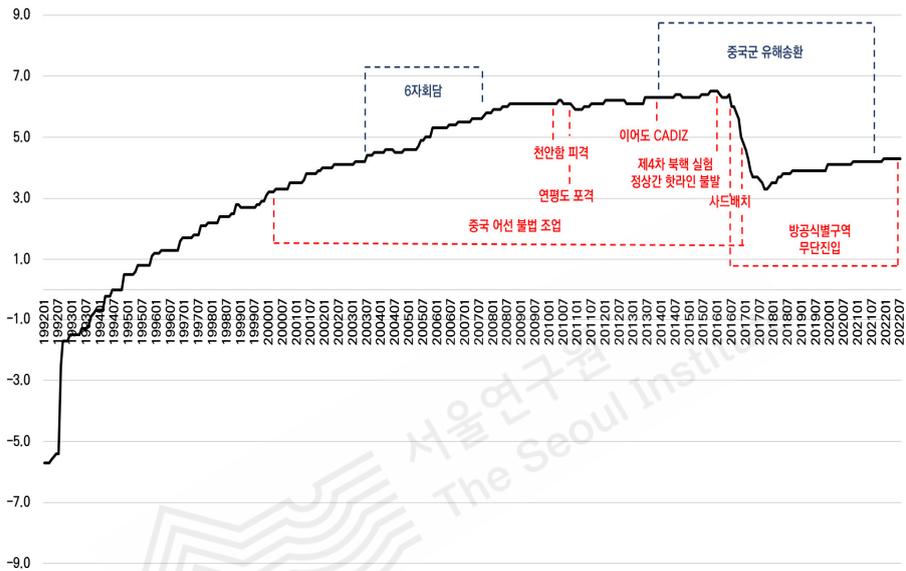
12) Boulding, K. E., 1956, *The Imag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oulding, K. E., 1959,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2).

13) Kaplowitz, N., 1990, “National Self-Image, Perception of Enemies, and Conflict Strategies: Psychopolitical Dimen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Psychology*, 11(1), pp.41~47.

14) Schafer, M., 1997, “Images and Policy Preferences”, *Political Psychology*, 18(4), pp.814~815; Cottam, M. L., 1985, “The Impact of Psychological Images on International Bargaining: The Case of Mexican Natural Gas”, *Political Psychology*, 6(3), pp.414~415.

15) 조영남, 2022, “한-중관계 30년의 분석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p.8~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가졌던 ‘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반중 정서’가 생긴 측면도 있지만, ‘기대’가 무너지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 혹은 가중시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심리적 특성이 국가이미지(혹은 인식)에서도 발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이미지 개념의 이론화 과정에서 ‘기회’(opportunity) 요소는 ‘위협’(threat)과 동시에 고려되었고, ‘문화’와 ‘능력’(capability) 등 요소도 ‘우세-유사-열세’ 척도로 측정된다.¹⁶⁾



[그림 1-4] 한중 외교·안보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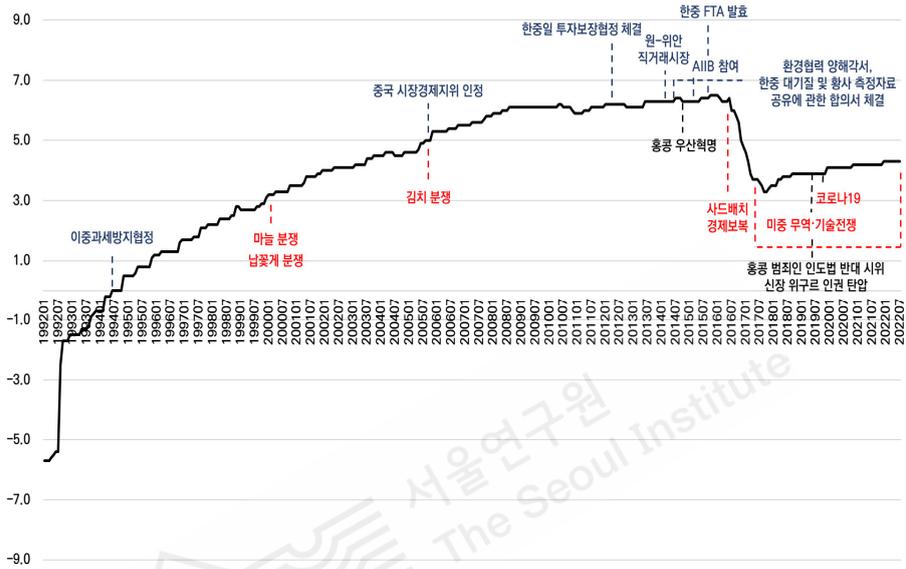
자료: <http://www.tuiir.tsinghua.edu.cn/kycg/zwgxsj.htm>(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 홈페이지)와 문헌회고를 통해 저자 작성.

넷째, 분야는 외교·안보,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문화로 구분하고, 주요 사건과 이슈는 문헌 회고를 통해 추출한다. 외교·안보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선언과 이여도 이슈, 북핵실험(특히, 제4차 북핵실험과 정상간 핫라인 불발), 사드배치 등을 포함한다([그림 1-4] 참조).¹⁷⁾ 정치·경제 분야는 양국 간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이념

¹⁶⁾ Herrmann, R. K. et al., 1997,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3), pp.408~409.

¹⁷⁾ 정재호, 2021, 「생존의 기로: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79~301; 이민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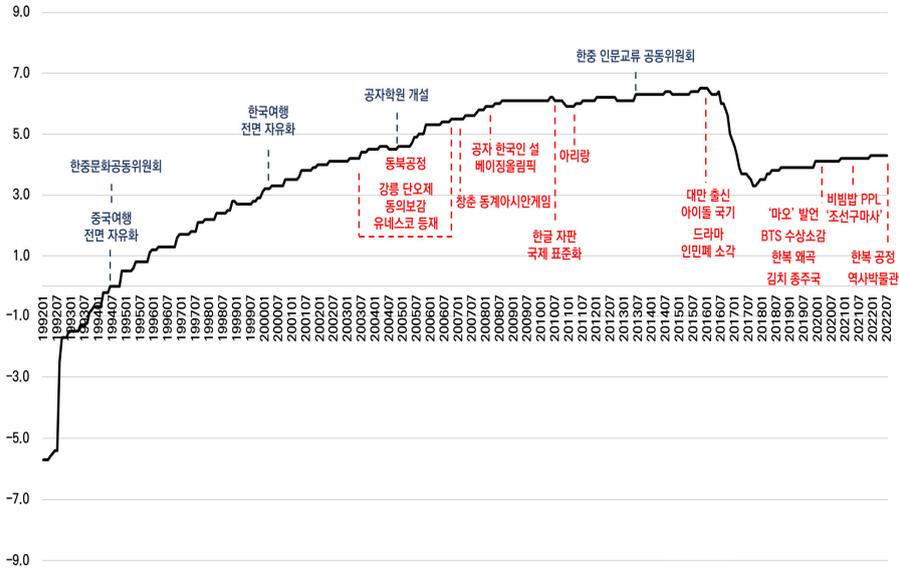
을 포함한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한 것으로 마늘과 납꽃계 분쟁, 김치 분쟁,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보복, 미중 무역·기술전쟁에 더해 인권과 환경오염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이슈를 검토한다(그림 1-5) 참조).¹⁸⁾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 같은 경우는 동북공정부터 양국 간 발생한 각종 역사·문화 갈등과 함께, 인적교류 요인의 영향 변화 등을 분석한다(그림 1-6) 참조).¹⁹⁾



[그림 1-5] 한중 정치·경제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

자료: <http://www.tuiir.tsinghua.edu.cn/kycg/zwgxsj.htm> (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 홈페이지)와 문헌회고를 통해 저자 작성.

- 2022, “정치외교: 짙어진 미중관계 종속화와 ‘구동화이’ 접근 필요”,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역음,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오산: 다해, pp.65~86; 김선재, 2022, “국방: 긴장된 외부환경 속에서 일구어낸 성과, 그리고 도전”,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역음,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오산: 다해, pp.104~131 등.
- 18) 주장환, 2011,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마늘에서 자동차까지……한·중 간 경제적 마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정재호 편저,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p.84~93; 정환우, 2022, “한중 경제통상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p.123~128,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송지연, 2020, “사드(THAD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6권 3호, pp.144~15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Lee, M. and Y. Hao, 2018, “China’s Unsuccessful Charm Offensive: How South Koreans have Viewed the Rise of China Over the Past Decad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7(114), pp.877~879 등.
- 19) 오병수, 2017, “역사교류”, 성균관대연구소 역음, 『한중수교 25년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p.172~180; 이민규·박은현, 2017, 『한중관계 30년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pp.32~36; 이육연, 2022, “한중 수교 30년 문화갈등: 양상과 전개 과정, 극복 과제”,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19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등.



[그림 1-6] 한중 사회·문화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

자료: <http://www.tuiir.tsinghua.edu.cn/kycg/zwgxsj.htm>(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 홈페이지)와 문헌회고를 통해 저자 작성.

다섯째, 한국인의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영향 변수와 '지속성' 등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식과 사건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인'의 국가이미지와 공공외교 효과 분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종적·횡적 비교분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²⁰⁾ 이번 연구에서는 소위 말하는 '축적된 이미지'와 여부 분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시계열과 종적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퓨 리서치센터 호감도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BBC World Service/Globe Scan/PIPA 조사 결과 등을 주로 활용한다. 사건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상의 기관에서 실시한 개별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송국, 여론조사

20) 여론조사를 통해 대중국 국가이미지 혹은 인식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는 Lee, M. and Y. Hao, 2018, "China's Unsuccessful Charm Offensive: How South Koreans have Viewed the Rise of China Over the Past Decad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7(114), pp.872~884; Xie, T. and Benjamin I. Page, 2013, "What Affects China's National Image? A Cross-national Stud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2(83), pp.850~867; Huang, M. and Yun-han Chu, 2015, "The Sway of Geopolitic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Identity: Why are Some Asians More Favorable toward China's Rise than Other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4(93), pp.421~441 참고.

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것을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다른 한편, 사건과 요인의 '지속성' 분석 과정에서 시기별로 유사 사건과 질문은 구체적인 질문이 상이하더라도 같은 변수로 분석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가공 없이 명시한다.



02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와 한중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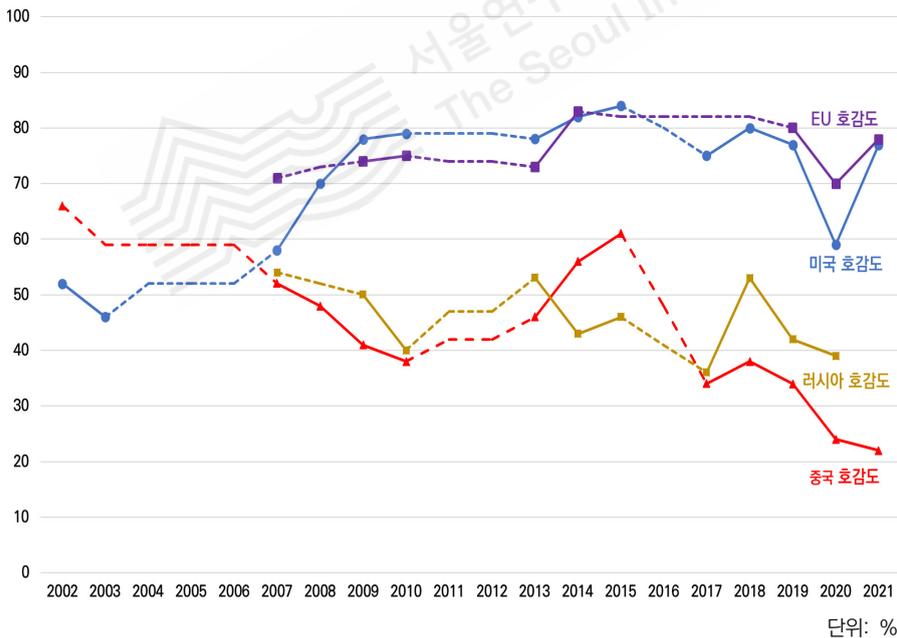


- 1_대중국 호감도와 상대적 인식
- 2_한중관계 판단과 상대적 인식

02.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와 한중관계 인식

1_대중국 호감도와 상대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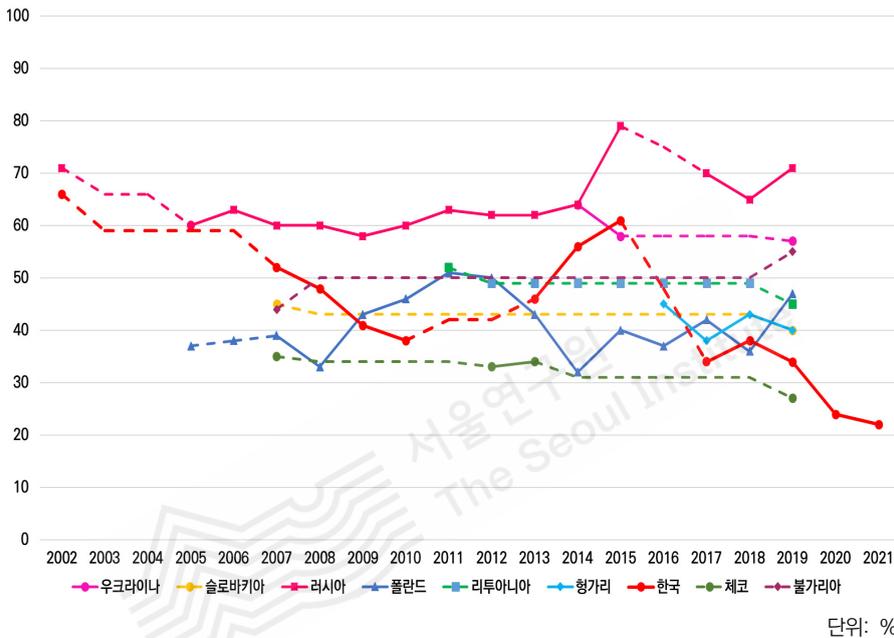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2년 66.0%를 보이던 호감도는 2008년 48.0%로 50.0% 밑으로 하락하고, 2010년 38.0%까지 급락한다. 2015년 다시 61.0%까지 회복되지만, 2021년 22.0%까지 떨어진다.



[그림 2-1] 한국인의 주요국 호감도 추이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은 대략 5년 단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중 정서'를 유발한 사건이나 이슈 발생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와 동시에 '기대심리'가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호적인 인식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대심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속에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와 여파('지속성' 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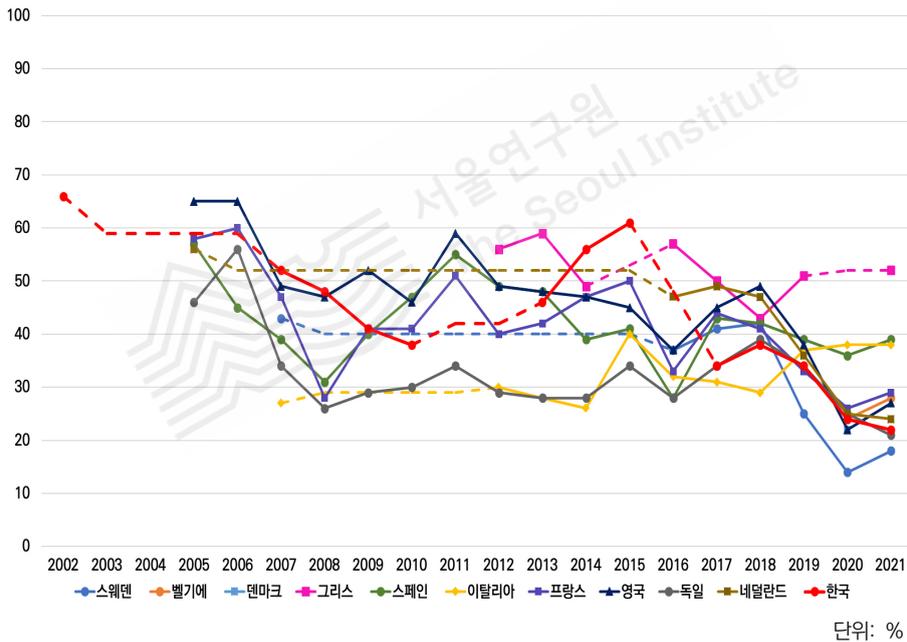
[그림 2-2] 한국과 러시아·동유럽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른 주요국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보다 높다. 하지만, 2007년 조사부터 한국인의 G2에 대한 호감도는 상반된 추세를 보인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대체적으로 70.0~80.0%대를 보이는 것에 반해 대중국 호감도는 50.0% 미만 수준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보다도 더 낮은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호감도 추이를 보면, 2014~2016년을 제외하고 한국인의 대러시아 호감도가 더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39.0%인 것에 반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4.0%에 불과하다.²¹⁾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 다른 국가 대비 더 낮고 최근 급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륙별 대중국 호감도를 알아보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은 대중국 호감도는 대륙별·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반중 정서'를 전 세계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특정 지역과 국가 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륙별 대중국 호감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기준 동유럽 8개 국가 중 한국보다 대중국 호감도가 낮은 국가는 체코(27.0%)뿐이고, 대부분 40.0%대 이상의 호감을 나타낸다. 그중, 러시아는 71.0%로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국가이다. 2002년 전후와 2014~2015년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가 대부분 동유럽 국가보다 높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그림 2-2) 참조.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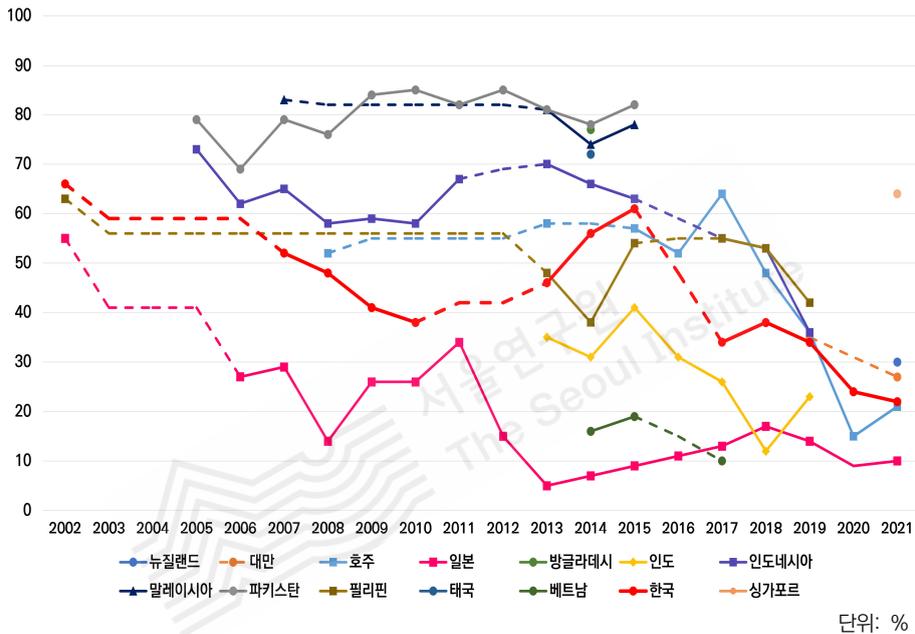
[그림 2-3] 한국과 북·서·남유럽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21)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22)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국가별 마지막 여론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특별히 밝힘. 이 연구에서는 마지막 여론조사 시기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국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함.

둘째, 동유럽을 제외한 10개 유럽 조사국 중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스웨덴(18.0%), 독일(21.0%) 그리고 덴마크(2020년 22.0%)를 제외하고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호감을 보인다. 특히, 그리스(52.0%), 스페인(39.0%), 이탈리아(38.0%) 등 남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외 국가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20.0%대의 호감도를 보인다. 러시아·동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2002년 전후와 2014~2015년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다른 유럽 국가 대비 좋은 수치를 보인다 ([그림 2-3] 참조).²³⁾



[그림 2-4]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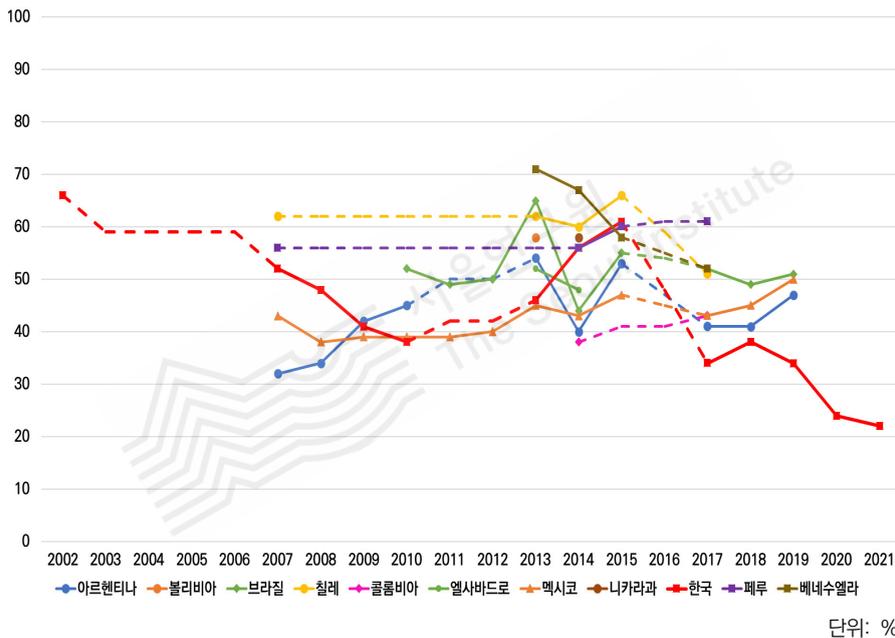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 (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셋째, 아시아 지역 국가 대부분이 중국에 비우호적이다. 아시아 지역 13개 조사국 중에서 2014~2021년 기간 한국보다도 더 낮은 호감도를 보인 국가는 일본(2021년 10.0%), 호주(2020년 15.0%), 인도(2018년 12.0%) 그리고 베트남(2017년 10.0%)으로 4개국이나 된다. 중국 핵심 주변국 대부분에서 '반중 정서'가 심각한 수준임을

²³⁾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 (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알 수 있다. 단, 중국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방글라데시(2014년 77.0%), 태국(2014년 72.0%), 싱가포르(2021년 64.0%) 국민의 대중국 호감도는 높게 나오는 등 국가별 차이를 보인다(그림 2-4 참조).²⁴⁾

넷째, 중남미 지역 국가 같은 경우는 조사국 10개국 모두 한국인보다 중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중국 호감도에 큰 변화가 없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2019년 기간 대부분 국가에서 41.0~61.0% 구간의 수치로 보인다. 최근 몇 년(2017년 이후) 50.0% 이상의 호감도를 보인 국가는 브라질(2019년 51.0%), 칠레(2017년 51.0%), 멕시코(2019년 50.0%), 페루(2017년 61.0%), 그리고 베네수엘라(2017년 52.0%) 등으로 다섯 국가이다(그림 2-5 참조).²⁵⁾



[그림 2-5]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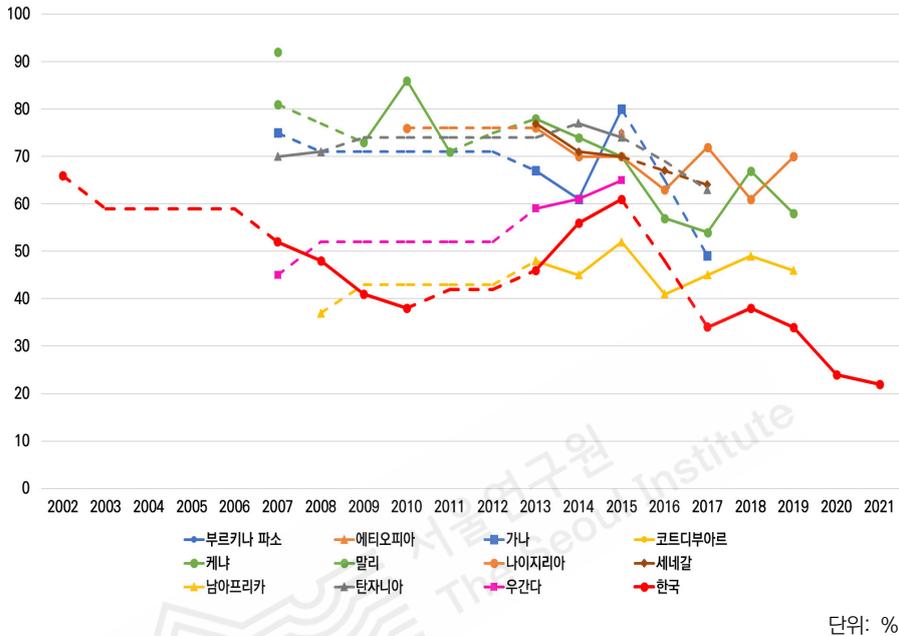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다섯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대중국 호감도는 중남미 국가보다 더 높게 나온다. 2015~2019년 기간 11개 조사국(코트디부아르와 말리는 2007년이 마지막으로

²⁴⁾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²⁵⁾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92.0%의 호감도 보임) 중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인 국가는 남아프리카로 2019년 46.0%(2016년 41.0%) 수준이다. 한국의 대중국 호감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국가들은 대부분 49.0~80.0% 구간의 대중국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6] 참조).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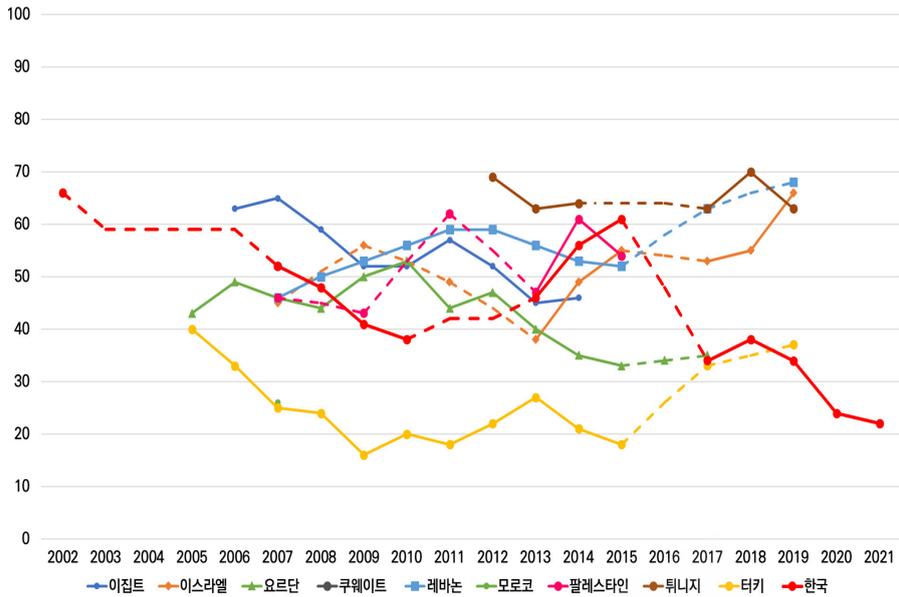
[그림 2-6]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도 대중국 호감도가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2014~2019년 기간 9개 조사국 중(쿠웨이트와 모로코는 2007년이 마지막 조사) 요르단과 터키가 30.0%대 호감도를 보인 것에 반해, 나머지 국가들은 46.0~70.0% 구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9년 이스라엘, 레바논, 튀니지는 각각 66.0%, 68.0%, 63.0%(2018년 70.0%)로 60.0%대의 높은 호감도를 보인다. 다른 한편, 중국에 가장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터키 같은 경우는 2009년과 2015년을 저점으로 점차 우호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7] 참조).²⁷⁾

²⁶⁾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²⁷⁾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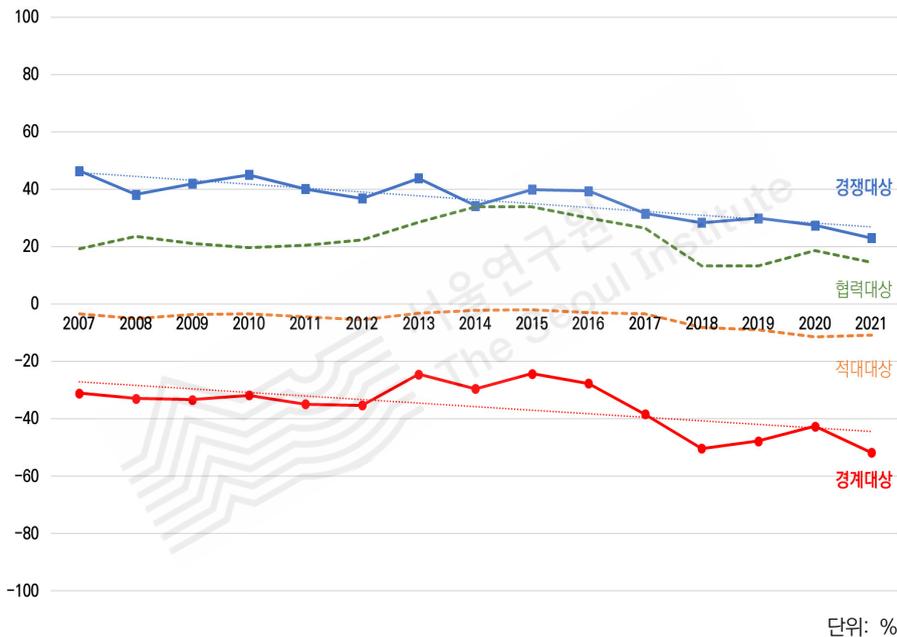
[그림 2-7] 한국과 중동 국가의 대중국 호감도 추이 비교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참고로 저자 작성.



2_한중관계 판단과 상대적 인식

한국인의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부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2021년 기간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한중관계를 ‘경계 관계’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51.8%로 50.0%를 넘긴다(그림 2-8 참조). 더 이상 단순한 ‘경쟁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2-8] 한국인의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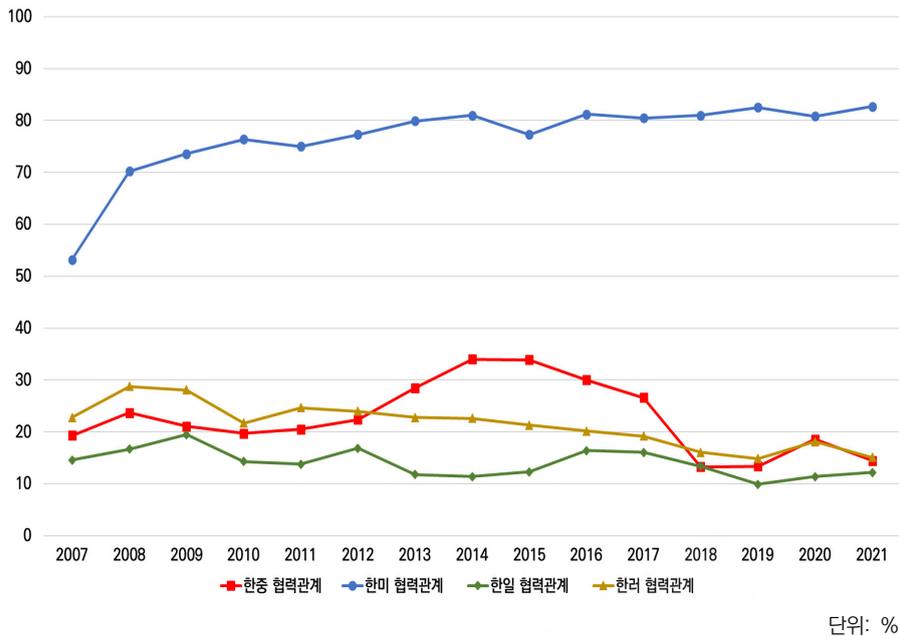
자료: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참고로 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쟁 관계’로 답한 비율은 2007년 46.4%에서 2021년 23.0%로 23.4%p 감소한 것에 반해, ‘경계 관계’로 답한 비율은 31.0%에서 51.8%로 20.8%p 증가한다. 같은 기간 양국 관계를 ‘협력 관계’로 답한 비율 역시 4.8%p 감소한 것에 반해, ‘적대 관계’는 7.5%p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 발전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 여론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가이미지 역시 2013~2015년 기간 회복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기간 ‘협력 관계’로 답한 비율이 28.5~34.0%인 것에 반해, ‘적대 관계’로 답한 비율은 2.0~3.1%에 불과하다. 또한 ‘경계 관계’라고 답한 비율도 가장 낮은 24.2%(2015년) 수준을 보였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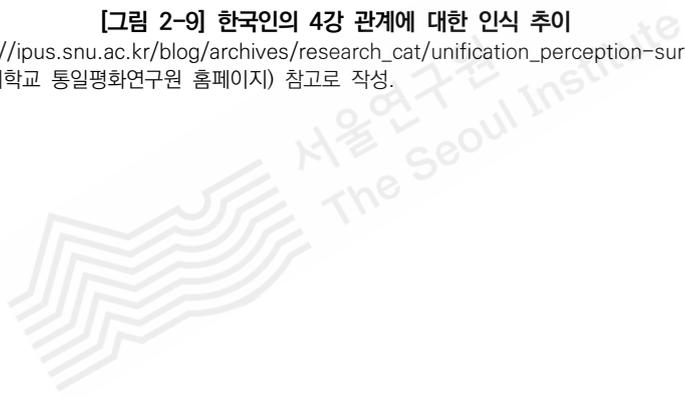
한국인의 한중관계에 대한 상대적 인식은 한미관계와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4강 국가 중 한국인은 유일하게 한미관계만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국가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2021년 기간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미관계를 ‘협력 관계’로 인식하는 한국인은 2007년 53.2%에서 2021년 82.7%로 29.5%p 증가하는 등 2016년부터 8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관계를 ‘협력 관계’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같은 기간 4.8%p 감소한다. 가장 높았던 2014년 34.0% 대비해서는 19.5%p 감소한 수치이다. 다른 한편, 한국인은 4강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일관계와 한러관계 또한 2021년 각각 12.2%와 15.1%로 두 국가 모두를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한일관계 같은 경우는 2019년 9.9%로까지 떨어지는 등 줄곧 10%대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한러관계에 대한 인식은 2008년 28.8%에서 13.7%p 하락하는 등 더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의 4강에 대한 인식은 한미, 한러, 한중, 한일 순으로 우호적이다. 물론,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가 2010년 중반 한러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약 10%p 높음). 다른 한편, 한중관계가 한미관계 대비 68.2%p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한국인의 한미동맹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다른 한편으론 한국인의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그림 2-9) 참조).

²⁸⁾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그림 2-9] 한국인의 4강 관계에 대한 인식 추이

자료: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참고로 작성.



03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요인



- 1_외교·안보 분야 주요 사건과 대중국 인식 영향
- 2_정치·경제 분야 주요 사건과 대중국 인식 영향
- 3_사회·문화 분야 주요 사건과 대중국 인식 영향

03.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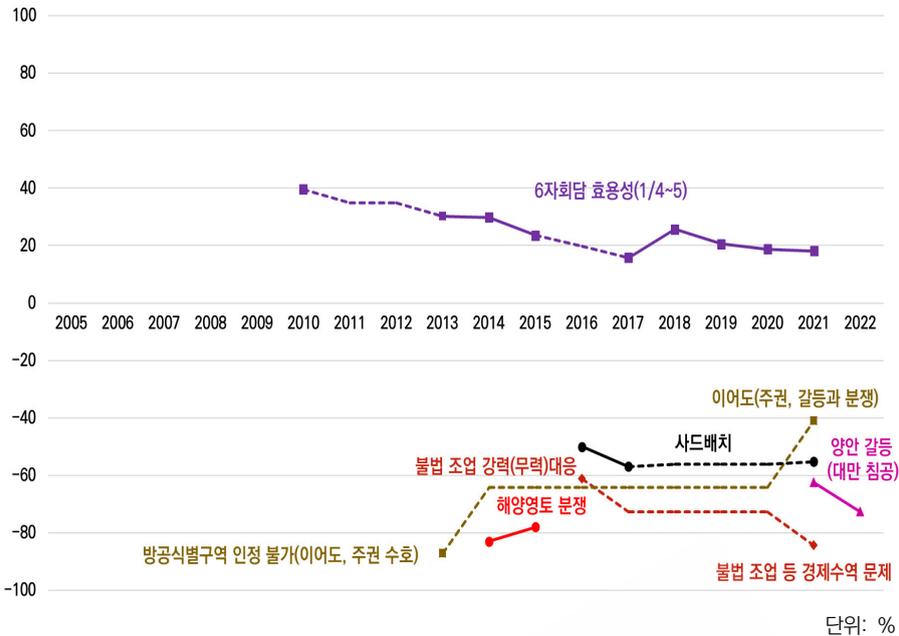
1_외교·안보 분야 주요 사건과 대중국 인식 영향

1) 외교·안보 분야 ‘반중 정서’ 요인과 지속성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국이 보인 ‘북한 편향적인 입장’으로 인해,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은 악화된다. 대중국 호감도가 2003년 66.0%에서 2010년 38.0%까지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 편향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줄지어 목격되면서, 수교 당시 품었던 북한 이슈를 둘러싼 중국의 전향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게 된다. 후진타오(胡锦涛) 집권 1기 6자회담에서 보여준 의장국 ‘리더십’이 두 사건에서도 발현되길 기대하였던 한국의 바람이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였음이 증명된 것이다.²⁹⁾ 천안함 피격 사건과 달리 북한의 도발이 명백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까지 중국이 사건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두 사건 발생 후, 한국인의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이슈에 대한 인식 악화는 여러 관련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다섯 국가 중(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국을 선택한 한국인은 2009년 15.8%에서 2011년 33.6%(2010년 24.6%)까지 상승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 시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2010년 55.5%에서 2011년 62.8%로 7.3%p 늘어난다([그림 3-2] 참조).³⁰⁾

29) 이민규, 2022, “정치외교: 짙어진 미중관계 종속화와 ‘구동화이’ 접근 필요”,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역음,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오산: 다해, p.65.

30)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그림 3-1] 한국인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사건과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자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5년 61.0%까지 회복되었던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가 다시금 22.0%까지 급락하는데 영향을 끼친 외교·안보 문제는 복합적이다. 사드배치 이슈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다른 이슈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슈 간 상관관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부정적 인식 형성에 상호 영향을 끼친 '악순환'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 참조). 우선, 2016년 북한의 제4차 북핵 실험과 연이어 터진 사드배치 이슈로 인해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급락하게 된다. 한중 정상 간 핫라인 불발 또한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아니다. 2017년 3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한국인(82.4%)이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다.³¹⁾ 이와 함께 사드배치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2016년 7월 50.0%에서 2017년 7월 57.0%로 점차 증가한다.³²⁾ 사드배치 이슈를 둘러싸고

31)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JTBC 뉴스, 2017.3.8., "[JTBC 여론조사] '사드보복 조치에 정부 대응 못하고 있다' 82.4%",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34791 참고.

32)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조선일보, 2017.7.7., "[궤멸 조사]사드 찬성 여론 최대치 기록...찬성 57% 반대 2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1097.html 참고.

중국과 강대강으로 맞대응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만(22.5%만 경제적·외교적으로 강경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는 입장) 사드배치 철수 등 '저자세'를 보이는 것 역시 반대한다. 사드배치 이슈는 2017년 10월 양국 간 구두 합의로 일단락이 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8월에 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55.3%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답한다.³³⁾ 사드 추가 배치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48.2%가 찬성하는 등 한국인의 사드배치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³⁴⁾

다음으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 역시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수교 이전부터 있었던 이슈이다. 수교 이전부터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양국은 2000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의 조업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충돌도 발생하게 된다. 2005년 연평도에 거주하는 한국 어민이 중국어선 4척을 직접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이 휘두른 둔기에 맞고 순직하는 일까지 일어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6년 한국 해경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시 함포 사격을 허용하는 조치(도주할 시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검거)를 발표하게 되면서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³⁵⁾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2005년과 2008년 발생한 사건들은 2010년 38.0%까지 대중국 호감도가 급락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 10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수협 관계자들의 불법 조업 규탄 집회가 열리고, 한국 정부의 이전보다 단호한 입장 표명 이후 양국 간 주요 갈등으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61.3%의 한국인은 정부가 외교적 마찰이 있더라도 무력 사용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

33) SBS NEWS, 2022.8.18., "[여론조사] 중국 반발하는 사드 운용 어떻게?... '정상화해야 한다' 55.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65056

34) 스트레이트 뉴스, 2022.5.11.,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사드 추가배치, 찬성 48.2% vs 반대 41.4%",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88>

35) 중국어선이 한강하구 수역까지 넘어와 조업하는 사태가 발생. 2011~14년간 연 2~3차례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129회, 2016년 1~6월간 788회까지 늘어남. 김선재, 2022, "국방: 긴장된 외부환경 속에서 일구어낸 성과, 그리고 도전",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역음,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오산: 다해, pp.112~116.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³⁶⁾ 사드배치 이슈보다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드배치 이슈 등으로 악화된 대중국 이미지가 불법 조업 이슈에 일정 부분 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21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불법조업 등 경제수역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84.3%를 차지하고 있는 등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⁷⁾

중국의 이어도 수역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과 무단진입 또한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악화에 기름을 부은 이슈이다. 2013년 중국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CADIZ를 설정한다. 중국이 설정한 CADIZ는 당시 일본과 침예한 갈등을 빚고 있던 센카쿠열도뿐만 아니라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 포함하면서 한중 양국 간 언제든지 영토갈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를 생성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초치하고 1951년 이후 처음으로 KADIZ 범위 조정을 단행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된다. 2016년 이후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 빈도는 2016년 약 40회에서 2018년 약 200회로 급증한다.³⁸⁾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설정과 무단진입에 대해 한국인들은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고, 이어도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11월에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87.1%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다.³⁹⁾ 2021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어도 연구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89.0%가 이어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할 관리 방안 중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해양 경계 획정 협상과 외국 어선 불법 어업단속 및 처벌 강화를 각각 33.0%와 29.0% 선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주문한다.⁴⁰⁾

2016년 발생한 사드배치 이슈와 다른 외교·안보 이슈의 부각으로 인해 한국인의 복핵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인식은 다시 한번 악화된다.⁴¹⁾ 한반도 평화를 위협

36)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폴리뉴스, 2016.10.13., “[리얼미터] 불법 중국어선 ‘무력 대응61.3% vs 외교적 대응33.7%”,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90238> 참고.

37) 14개 행위(이슈) 중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시사IN, 2021.6.17.,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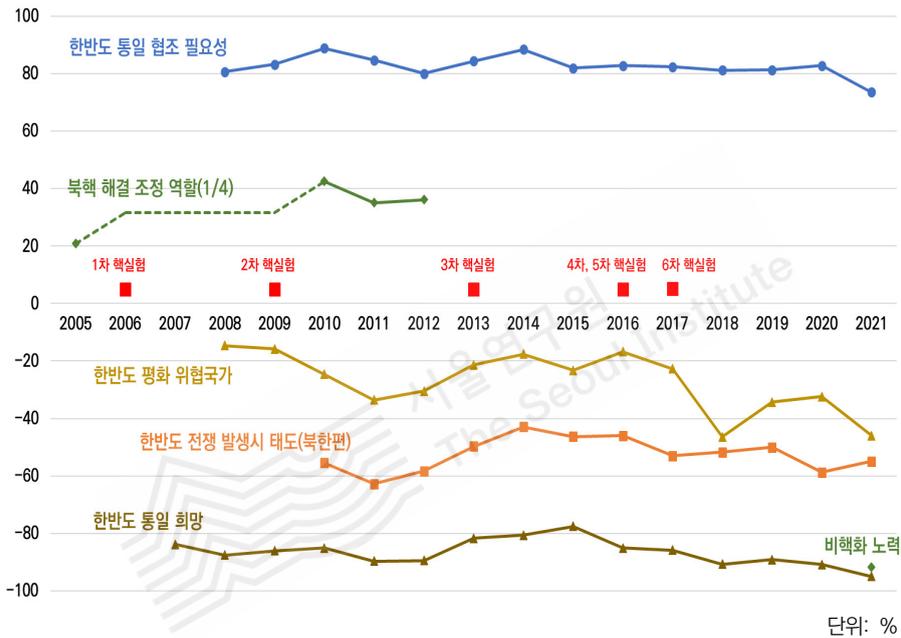
38) 김선재, 2022, “국방: 긴장된 외부환경 속에서 일구어낸 성과, 그리고 도전”,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역음,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오산: 다해, pp.118~128.

39)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JTBC 뉴스, 2013.11.27., “[여론조사]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따르지 않아야 87.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84694 참고.

40) 부산일보, 2021.02.15.,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1509313882290>

41) 2021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61.6%가 미국 주도의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고 답한

하는 국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을 선택한 한국인은 다시금 2016년 16.8%에서 2021년 46.0%(2018년 46.4%)까지 상승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2016년 46.0%에서 2021년 54.9%(2020년 58.7%)로 늘어난다.⁴²⁾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국 주도'를 선택한 한국인의 비율 역시 2013~2015년 기간의 14.7~17.0%에서 2018~2021년 기간 3.8~5.5%로 급감한다. 중국 주도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⁴³⁾



[그림 3-2] 한국인의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대중국 인식 추이

자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것에 반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해야 한다는 비율은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일보, 2021.6.14.,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2030세대 ‘中’이 더 싫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2670?did=NA> 참고.

42)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43) KBS 남북협력기획단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국민통일의식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https://office.kbs.co.kr/tongil/archives/category/unification-broadcasting-publications/unity-consciousness-search>(KBS 통일방송연구 홈페이지) 참고.

2) 외교·안보 분야 대중국 ‘기대심리’

북핵 이슈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은 경제발전 이슈와 함께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결심한 주요 동인이자 목표이다.⁴⁴⁾ 한중수교 당시 한국 국민 또한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방중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85.2%가 방중이 의의가 있다고 대답하였고(의의 매우 크다 41.1%), 국제외교와 북핵 억제를 선택한 국민이 각각 24.0%와 20.8%일 정도로 큰 기대감을 나타낸다.⁴⁵⁾ 한국인의 중국 역할론에 대한 기대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더욱 커지게 된다.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북핵 해결의 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였고, 이는 실제로 6자회담에서 보여준 의장국 ‘리더십’에 대한 우호적 평가로 이어진다. KBS 남북협력기획단에서 실시한 “국민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2005~2012년 기간 20.0~30.0%대의 한국인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005년 21.7%→2012년 27.7%, 2011년 30.4%). 이는 한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에 대한 기대(2005년 24.3%→2012년 16.7%, 2010년 13.9%)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대중국 호감도가 낮아지는 와중에도 중국의 중재 역할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방안으로 6자회담에 대한 평가 또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6자 회담이 끝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선택한 한국인은 2013년 30.2%로 남북대화 38.7% 다음으로 높았고, 2021년 최근에도 18.1%로 여섯 가지 방안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2018년 25.7%로 국제사회 제재보다 높음).⁴⁶⁾ 이러한 연유로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2021년 73.6%로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줄곧 80%대를 유지하고 있다.⁴⁷⁾ 즉,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통일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점이 특정 사건과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대중국 호감도를 반등시키는 기저에 깔린 심리라고 판단 내릴 수 있다.

44) 정재호, 201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48~181.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함께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수준의 중국 측 입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45) 김수환·표나리, 2022, “사회문화: 한중의 교차하는 역사·문화와 충돌하는 민족주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역음,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오산: 다해, p.179.

46) KBS 남북협력기획단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국민통일의식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https://office.kbs.co.kr/tongil/archives/category/unification-broadcasting-publications/unity-consciousness-search>(KBS 통일방송연구 홈페이지) 참고.

47)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2_정치·경제 분야 주요 사건과 대중국 인식 영향

1) 정치·경제 분야 ‘반중 정서’ 요인과 지속성

한국인은 중국 정치 시스템과 경제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소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6년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보복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중국과의 경제 마찰이 대중국 인식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던 것에 반해,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이에 따른 발전방식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정치체제 개혁 없는 발전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경제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및 판단과 달리, 한국인은 중국식 발전모델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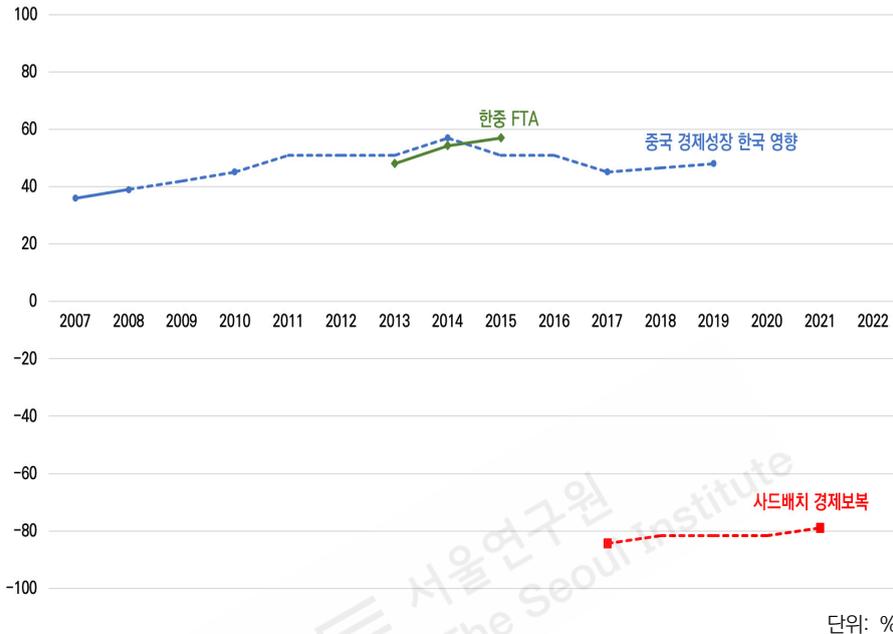
1999년 9월에 발생한 마늘 분쟁, 2000년 8월의 납꽃계 분쟁 그리고 2005년의 김치 분쟁이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악화에 끼친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 조사에서 66.0%로 높은 답변이 나왔고, 2010년 38.0%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치 분쟁 같은 경우는 “부끄럽고 민망한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양국 무역 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⁴⁹⁾ 2007년 퓨 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좋은 일’(good thing)이라고 답한 한국인 비율이 36.0%에 불과했지만, 2010년까지 45.0%로 상승하는 등 한중 경제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경제보복 카드를 사용하자 한국인의 한중 경제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표된 한중 FTA에 과반수가 ‘잘된 일’(57.0%)이라고 평가하며, 한중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 지 1년도 안 되어 인식이 급격히 바뀌게 된다. 2017년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3%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다.⁵⁰⁾ 그리고,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제보복

48) Gill, B. and Y. Huang, 2006, “Sources and Limits of Chinese ‘soft power’”,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48(2), pp.20~21; Cho, Y. and J. Jeong, 2008, “China’s Soft Power: Discussions, Resources, and Prospects”, *Asian Survey*, 48(3), p.466.

49) 주장환, 2011,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마늘에서 자동차까지……한·중 간 경제적 마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정재호 편저,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p.91~92.

50)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JTBC 뉴스, 2017.3.8., “[JTBC 여론조사] ‘사드보복 조치에 정부 대응 못하고 있다’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사건(78.9%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으로 조사된다.⁵¹⁾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가 2021년 22.0%까지 급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한국인의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자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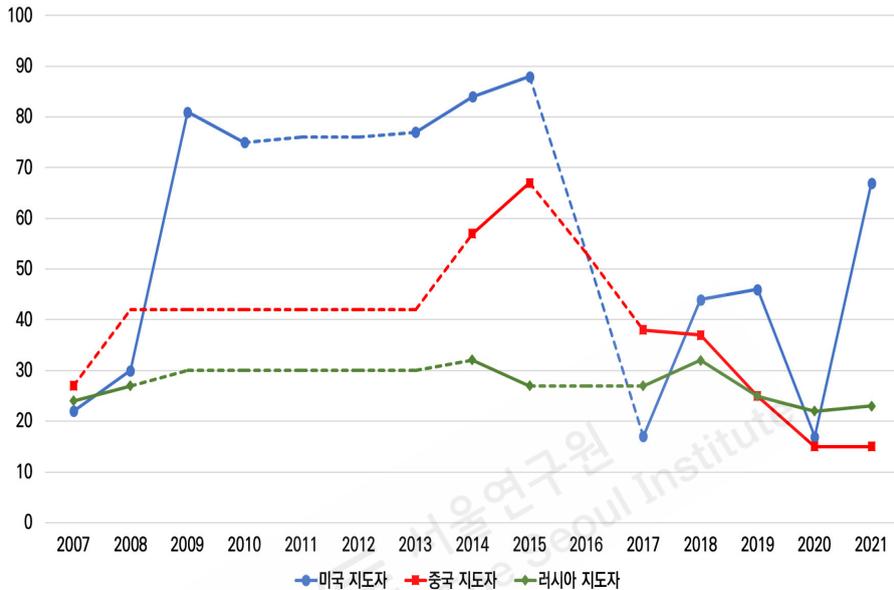
경제 분야와 달리, 중국의 정치체제와 발전모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2010~2013년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2개 아시아 국가의 국민 중 중국을 자국의 발전모델로 선택한 비율은 12.2%에 불과하였고, 한국인은 8.2%로 다른 아시아 국가 국민보다 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⁵²⁾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인들은 중국주석의 리더십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2007년 중국주석을 신뢰한다고 답한 한국인

82.4%",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34791 참고.

51)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IN, 2021.6.17.,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참고.

52) Welsh, B. and A. Chang, 2015, "Choosing China: Public Perceptions of 'China as a model'",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4(93), pp.443~447.

비율은 27.0%에 불과하다. 2014~2015년 기간 57.0~67.0%까지 상승하였지만, 2021년 15.0%까지 급락한다.⁵³⁾ 2021년 기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67.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2015년 88.0%로 최고치 기록). 중국 정치체제에서 나오는 리더십을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그림 3-4) 참조).



단위: %

[그림 3-4] 한국인의 주요국 지도자에 대한 인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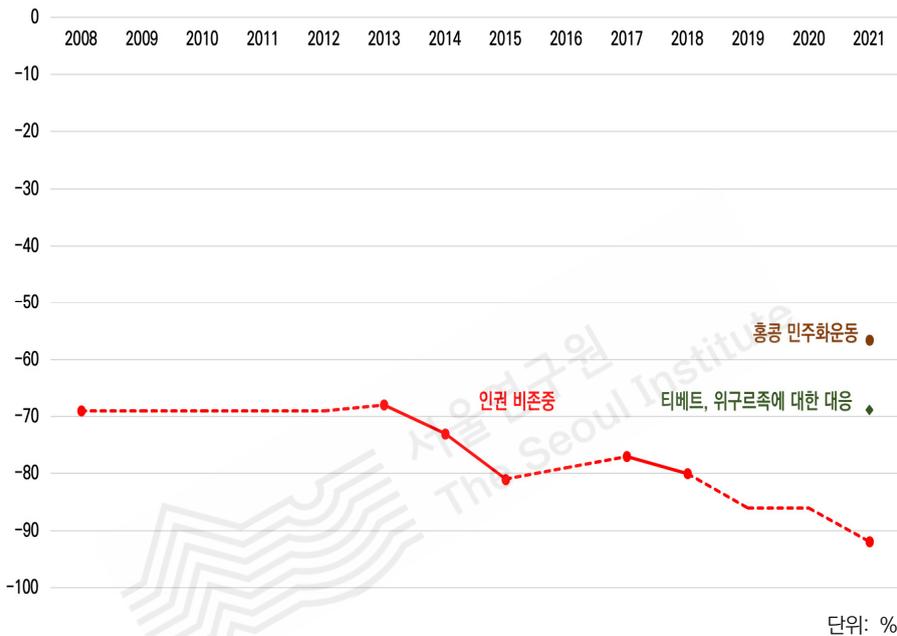
자료: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한국인은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08년 중국 정부가 인권을 존중한다고 답한 한국인은 23.0%에 불과하다. 한국인의 중국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중국 호감도가 2015년 61.0%까지 상승하는 와중에 더 심화된다. 2015년 조사에서 15.0%만 존중한다고 대답하였고, 그 수치는 2021년 호감도가 22.0%까지 하락할 때, 7.0%까지 동반 급락한다.⁵⁴⁾ 중국의 인권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악화된 주된 이유는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발생한 우산혁명과

53)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찬성한 비율이 69.0%로 높았음을 알 수 있음.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79>(한국갤럽 홈페이지).

54)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신장지역 인권 문제 역시 인식 악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시사I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티베트, 위구르족에 대한 대응(68.9%)과 홍콩 민주화 운동(56.6%)이 각각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선택된다.⁵⁵⁾ 한국인의 중국 인권 상황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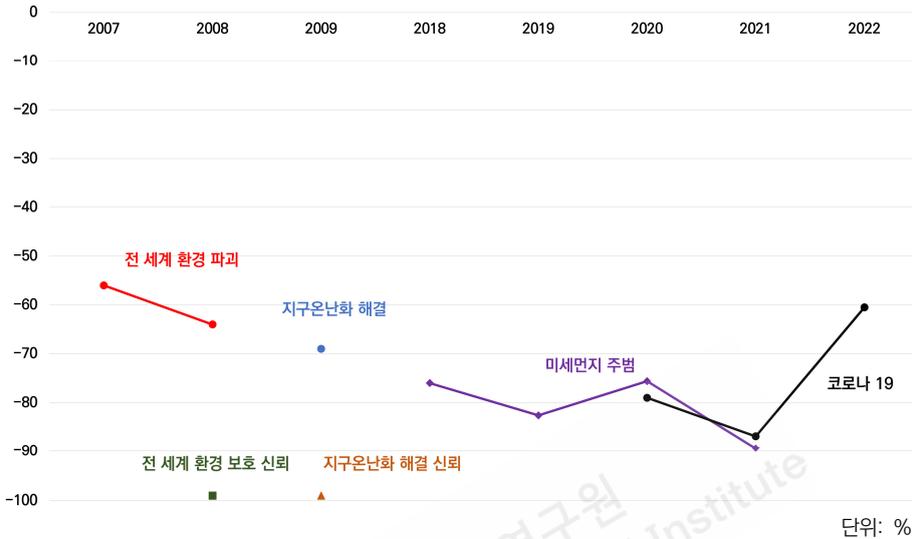
[그림 3-5] 한국인의 중국 인권 정책과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자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불만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99.0%에 해당하는 절대다수의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옳은 일'(right thing)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2008년 관련 조사에 의하면, 83.0%의 한국인은 중국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미세

55)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IN, 2021.6.17.,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참조.

먼지가 이슈가 되면서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급격히 악화된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주범을 중국으로 지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89.4%)을 가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고 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한국인의 중국 환경·전염병 정책과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자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악화에 ‘치명타’를 안긴 사건이다. 코로나19 발생지역이 중국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중국 호감도 급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퓨 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79.0%가 중국의 대응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 14개 조사국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이다.⁵⁶⁾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중국 이미지는 2021년 조사에서 더욱 높아진다. 코로나19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 가장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 1위에 꼽혔으며(87.3%),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은 행위·사건 중 두 번째(86.9%)로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⁵⁷⁾ 이런 인식으로 인해, 2020년 관련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58.3%) 혹은 부분적(28.9%)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한국인이 87.2%나 차지한다.⁵⁸⁾ 이뿐만 아니

⁵⁶⁾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⁵⁷⁾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IN, 2021.6.17.,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구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참고.

라, 2022년 조사에서 코로나19 기간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접한 집단 1위로 ‘중국’(60.5%)이 선택되는 등 ‘코로나19=중국’ 등식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2) 정치·경제 분야 대중국 ‘기대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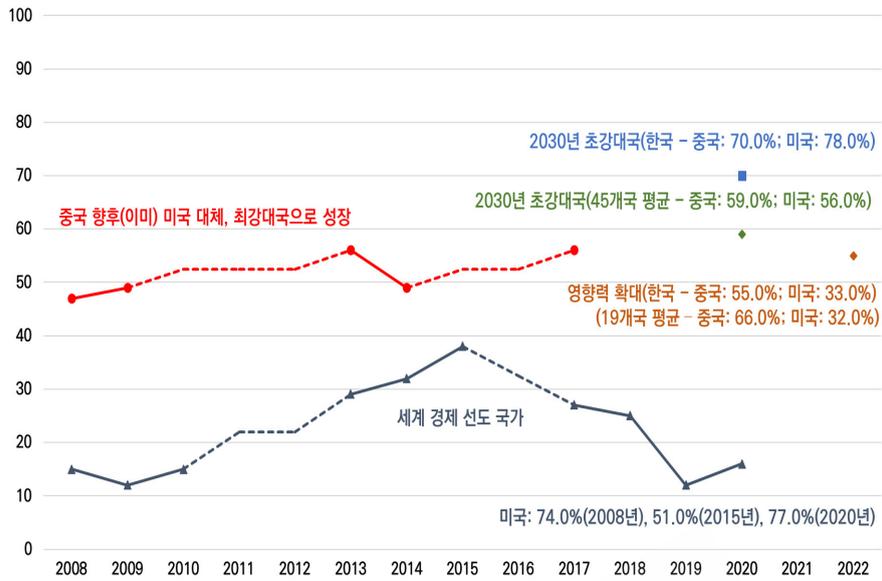
중국의 발전모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인은 중국의 부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퓨 리서치센터에서 2008~2017년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답변 비율이 2008년 47.0%에서 2017년 56.0%까지 상승한다. 2020년 11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0%에 해당하는 한국인은 2030년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한다. 이는 45개국 평균 59.0%(미국 56.0%)보다 높은 수치이다.⁶⁰⁾ 2022년 퓨 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55.0%의 한국인은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한다. 현재가 기준인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조사가 대중국 호감도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2008년 15.0% → 2015년 38.0% → 2020년 16.0%), 한국인은 중국 부상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2030년에도 미국이 초강대국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78.0%로 높고(45개국 평균 56.0%),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19개국 평균 66.0%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미국이 비교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전략적 헤징’과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국 호감도가 떨어지면서 영향력 확대에 대한 판단 역시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58) 쿠키뉴스, 2020.2.26.,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 여론조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중국인 입국금지”,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2260038>

59) 참세상, 2022.8.17., “10명 중 6명 ‘코로나19 이후 혐오 표현 늘어’...‘사회적 양극화’ 때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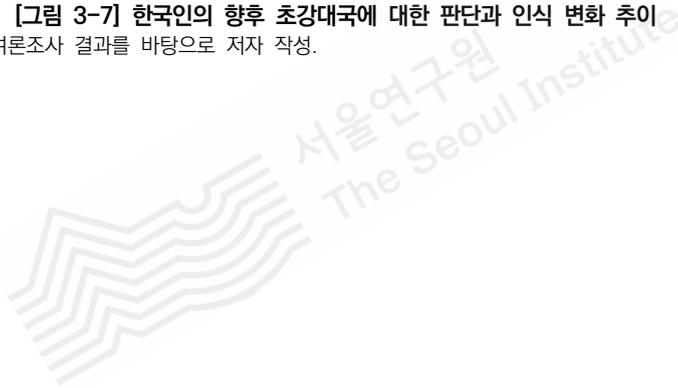
60)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83>(한국갤럽 홈페이지).



단위: %

[그림 3-7] 한국인의 향후 초강대국에 대한 판단과 인식 변화 추이

자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_사회·문화 분야 주요 사건과 대중국 인식 영향

1) 사회·문화 분야 ‘반중 정서’ 요인과 지속성

한중 양국 국민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에 더해 중국의 문화부흥 정책 등으로 인해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협력의 촉매제가 아닌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⁶¹⁾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교류가 양국 국민 간 인문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

2003~2004년에 발생한 ‘동북공정’ 이슈는 한중 양국 간 발생한 대표적인 역사·문화 갈등이자 ‘제1 전환점’이라 평가될 정도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이 2002년 66.0%에서 2010년 38.0%까지 악화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003년과 2006년 동북공정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진 이후 실시한 퓨 리서치센터의 호감도 조사에 의하면, 대중국 호감도는 2007년 52.0%까지 하락하고, 2009년까지 특별한 외교·안보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1.0%까지 급락한다. 2004년과 2006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구려 역사 왜곡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9.7%와 63.4%나 될 정도로 ‘공분’을 산다.⁶²⁾

‘지속성’ 측면에서 ‘동북공정’이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평가내릴 수 있다.⁶³⁾ 2007~2010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북공정을 인지하고 있는 한국인 비율이 62.5~74.8%로 대다수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⁶⁴⁾ 또한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기대(74.4%)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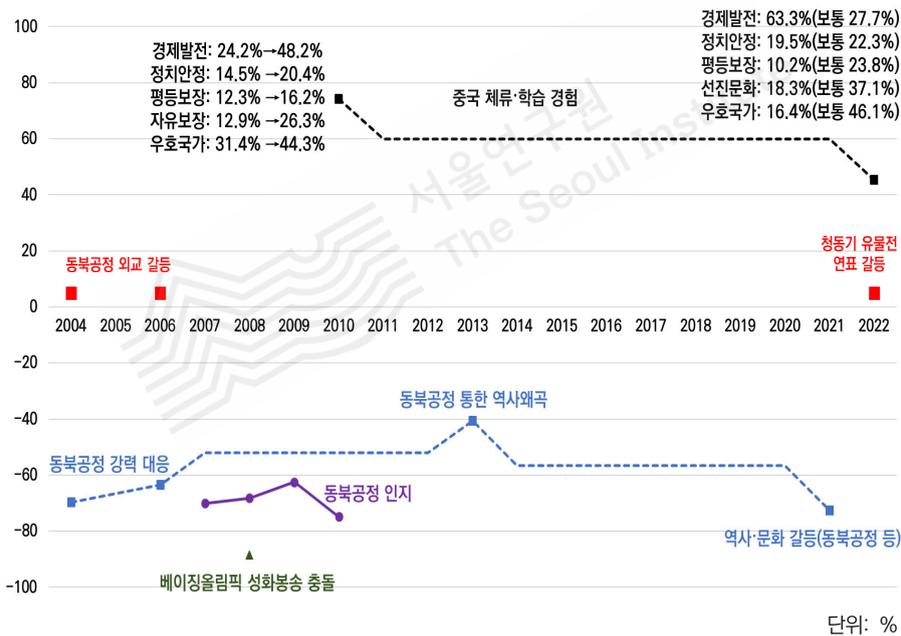
61) 중국인의 민족주의 정서는 고대 중화질서에 대한 자부심과 ‘백년국耻’(百年国耻)로까지 묘사되는 근대 역사가 남긴 수치심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이 낳은 부흥에 대한 자신감 등이 혼합되어 형성됨. 이민규, 2020,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선 한중관계”, 이희옥·강수정 책임편집,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한·중 학계의 시각』, 서울: 도서출판 선인, p.107.

62) Chung, J., 2009, “China’s ‘Soft’ Clash with South Korea: The History War and Beyond”, *Asian Survey*, 49(3), p.474; 중앙일보, 2006.9.7., “[Joins풍향제] 동북공정에 강력히 대처하라’ 63.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41266#home>

63)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중국에 대한 ‘환상’(China Fantasy)이 깨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음. Kim, T., 2008, “An Emerging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Beijing and Seoul? Myths and Realitie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22(2), p.111.

64) 동북공정을 인지하는 중국인은 25.8~42.2%에 불과. <https://hflib.kr/#/search/detail/184625?offset=1>(동북아역사자료센터 홈페이지)

(40.7%)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꼽는다([그림 3-8] 참조).⁶⁵⁾ 동북공정이 표면적으로 일단락되었음에도 한국인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 귀속권 문제이자 글로벌 문화표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 역사라는 개별 사안이 아닌 역사적,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⁶⁶⁾ 다른 한편으로,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충돌 사건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간 지속적으로 역사·문화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유사 성질의 역사 갈등뿐만 아니라 문화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역사·문화 갈등이 대중국 인식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22년에 발생한 한·중·일 청동기 유물전 한국사 연표 논란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이 갈등의 주체였고, 미디어 등 언론 보도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점은 '각인' 효과를 배가시켰다고 판단내릴 수 있다.



[그림 3-8] 한국인의 주요 사회·문화 이슈에 대한 인식 추이

자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5)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으로 '일본 역사왜곡 공동대응'(10.9%)을 꼽음. 뉴스타운, 2013.6.26., "한중 정상회담 기대된다 74.4%",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94>

66) 이옥연, 2022, "한중 수교 30년 문화갈등: 양상과 전개 과정, 극복 과제",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18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이민규·박은현, 2021, 「한중관계 30년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p.35.

[표 3-1] 한중 간 대표적인 역사·문화 갈등 사례

| 일시 | 갈등 사례 | 대중매체 |
|-------|--|------------------|
| 2003년 | • 동북공정 | |
| 2005년 | •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신청 | |
| 2006년 | • 동북공정 • 동의보감 등재 신청 | |
| 2007년 | • (창춘 동계아시아게임 시상식)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백두산은 우리땅' 퍼포먼스 | |
| 2008년 | • 공자 한국인 설전 •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폭력 사태 • SBS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사전 보도 | ○ |
| 2010년 | • 첨단 정보기기 한글 자판 국제표준화 논란 | |
| 2011년 | • 아리랑 중국 국가무형문화 유산 등재 | |
| 2014년 | • 온돌 유네스코 등재 신청 | |
| 2016년 | • 대만출신 아이돌 가수의 '청천백일기' 사건 • KBS 드라마 '무림학교' 인민폐 소각 장면 | ○ ○ |
| 2020년 | • KBS '놀면 뭐하니', '마오 어때요' 발언 • BTS의 한국전쟁 관련 밴 플리트상(Van Fleet Award) 수상소감 • 중국 모바일 게임 사이닝니키, 한복 왜곡 논란 • 한복 기원설 • 파오차이, 김치 중주국 논란 | ○ ○ ○ ○ |
| 2021년 | • 중국 유명 유튜버 리쯔치(李子柒), 김치를 중국음식으로 소개 • tvN 드라마 '빈센조', 중국 브랜드 비빔밥 PPL 논란 •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으로 폐지 | ○ ○ ○ |
| 2022년 | •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조선족 한복 논란 • 한·중·일 고대 청동기 유물전 연표 논란 | |

주: 2017년 이후 사드배치 이슈로 발생한 사회문화 갈등은 미포함.

참고: 이민규, 2020, 「중국의 유럽 선진국 대상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p.7 바탕으로 내용 보완.

2) 사회·문화 분야 대중국 ‘기대심리’

한중수교 당시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이 관계 발전의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되었던 것처럼, 사회·문화교류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판단과 대안’은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양국 모두 한자권 문화로 유교로 대표되는 전통 사상을 함께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긴 공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고 감정교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⁷⁾ 이러한 연유로 한중 양국 사이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고, 공공외교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문화교류 강화가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되곤 한다. 정부 주도의 전통문화 교류가 아닌 민간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과 이해 제고를 주문했던 것도 직접적인 감정교류와 경험을 통한 이해 증진이 양국 간 신뢰 구축의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⁶⁸⁾

사회·문화 교류 특히,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교감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실질적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혹은 노력)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관심과 생활(유학 포함) 경험이 있는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가 하락하는 두 시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임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3~4월에 중국 관련 전공자 311명(6개월~2년 이상 체류 비율 79.9%)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86.6%가 중국 체류 경험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응답했고, 그중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74.3%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 체류 이후 ② 48.2%(24.0%p 증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 ③ 20.4%(5.9%p 증가)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 ④ 16.2%(3.9%p 증가)가 평등이 보장되는 국가, ⑤ 26.3%(13.4%p 증가)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⑥ 44.3%(12.9%p 증가)가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 등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⁹⁾

67) 이민규·박은현, 2021, 「한중관계 30년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pp.32~33.

68) 李熙玉, 2015, “韩中公共外交与人文纽带”,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第03期, p.30.

69) 김경혜, 2011, “국내 중국학관련전공 대학생의 중국·중국인에 대한 인식 -중국유학 경험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32집, pp.215~222,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2년 사이버대학교 중국 학습자 256명(중국 경험 73.4%)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치(민주, 개인 자유)와 사회·문화적(빈부격차) 이미지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① 63.3%(보통 27.7%)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 ② 19.5%(보통 22.3%)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 ③ 10.2%(보통 23.8%)가 평등이 보장되는 국가, ④ 18.3%(보통 37.1%)가 선진화된 문화를 가진 국가, ⑤ 16.4%(보통 46.1%)가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 우호적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보통’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중국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 내릴 수 있다.⁷⁰⁾



70) 임규섭, 2022, “중국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 사이버대학교 중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중사회과학 연구』, 20권 3호, pp.105~115, 한중사회과학회.

04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정책적 시사점



- 1_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와 '실망'의 복합적 이미지와 특징
- 2_대중국 도시외교 시사점

04.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정책적 시사점

1_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와 ‘실망’의 복합적 이미지와 특징

1992년 수교 이래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를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기대’와 ‘실망’이 혼재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교 당시와 교류·협력 과정에서 가졌던 중국의 부상과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됨과 동시에 일련의 사건과 이슈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인지화’되고 있다. 즉,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분야별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1]과 [표 4-2] 참조). 첫째,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인은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사드배치 사건이 터진 이후 비율이 다소 낮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70.0~80.0%의 높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은 북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중국의 ‘중재(혹은 조정)’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기대감은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에서 중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이슈로 인해 북한 관련 이슈를 둘러싼 중국의 전향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반중 정서’만 극대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북한’과 ‘영토’ 관련된 이슈들이 대상을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속성’ 특징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이슈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점이다.

둘째, 정치·경제 분야에서 한국인은 중국의 경제성장 더 나아가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정치체제와 그 기반의 발전모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기회’로 인식한 한국인은 사드배치

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 공간’을 더욱 중시한다. 하지만, 정치체제와 발전모델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줄곧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과 관련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인지화’되어 있고, 관련 사건이 불거졌을 때 부정적 인식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한국인은 일당 체제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중국 호감도가 상승할 때,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증가하지만 폭이 크지는 않다. 중국 공산당, 특히 주석에 대한 불신은 인권, 환경 그리고 전염병 정책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투영된다.

[표 4-1] 시기별·분야별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 변화 추이와 지속성

| 분야 | 이슈 | 기대심리 | | | 지속성 |
|------------|---------------|---------------------------------------|---------------|---------------|-----|
| | | 2002~2010년 기간 | 2011~2015년 기간 | 2016~2021년 기간 | |
| 외교·안보 | 통일 | • 한반도 통일 협조 | | | ○ |
| | | 80.7~88.9%(↑) | 80.1~88.5%(→) | 73.6~82.8%(↓) | |
| | 북핵 | • 북핵 해결 중재 역할 | | | × |
| | | 20.7~42.4%(↑) | 35.1~36.2%(→) | - | |
| | | • 6자회담을 통한 협상 | | | × |
| | | 39.6% | 23.5~30.2%(↓) | 15.8~25.7%(↓) | |
| • 중국 주도 해결 | | | × | | |
| - | 14.7~17.0%(↓) | 3.8~16.4%(↓) | | | |
| 정치·경제 | 패권 | • 미국 대체, 초강대국 성장 | | | ○ |
| | | 47.0~49.0%(↑) | 49.0~56.0%(↑) | 56.0~70.0%(↑) | |
| 사회·문화 | 인적 교류 | • 인적교류, 상호 교감과 이해 증진, 실질적 교류·협력 기반 마련 | | | ○ |
| | | 전 분야 인식(↑) | - | 전 분야 인식(→) | |

자료: 저자 작성.

셋째,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국인은 중국의 문화부흥 정책을 역사 왜곡으로 인식하면서 역사·문화적 동질성에서 ‘비슷함’보다는 ‘다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사 왜곡 논쟁에서 시작된 역사 갈등이 문화 갈등으로 확장되면서 정부와 학계 간 이슈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장된 국면이다. 그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의 상반된 보도 형태에 더해 ‘악마화’까지 일어나면서 ‘공유된 긴 역사’가 오히려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 다행인 것은 중국을 전공하거나 체험 경험이 있는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거나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오해'(misunderstanding)가 '오지각'(misperception)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구조'가 형성되기 전 '감정'과 '정서'적 요인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 시기별·분야별 한국인의 '반중 정서' 요인과 지속성

| 분야 | 이슈 | 주요 사건 | | 지속성 |
|-------|-----|-------------------------|---------------------------|--------|
| | | 2002~2010년 기간 | 2016~2021년 기간 | |
| 외교·안보 | 북한 |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 북핵실험 사드배치 | ○ |
| | 영토 | 불법 조업 - | 불법 조업 방공식별구역(이어도) | ○ △ |
| 정치·경제 | 경제 | - | 사드배치 경제보복 | △ |
| | 체제 | 일당 체제 리더십 | 일당 체제 리더십 | ○ |
| | 인권 | 인권 비존중 정책 | 홍콩 민주화 운동 신장·티베트 지역 인권 | ○ |
| | 환경 | 지구 온난화 환경 정책(오염, 파괴) | 황사·미세먼지 | ○ |
| | 전염병 | - | 코로나19 | △ |
| 사회·문화 | 역사 | 동북공정(고구려 역사 왜곡 등) | 동북공정(청동기 유물전 등) | ○ |
| | 문화 |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신청 | 대만 출신 아이돌 '청천백일기' | ○ |
| | | 공자 한국인설 | '무림학교' 인민폐 소각 | |
| | |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 '놀면 뭐하니', '마오' 발언 | |
| | |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신청 | BTS 수상소감 | |
| | | 한글 자판 국제표준화 등 | 한복 기원설 김치 종주국 논쟁 | |
| | | '조선구마사' 소품 문제 등 | | |

주: '지속성'은 2002~2010년 기간에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의미, 그 기간은 2010~2015년 기간도 포함.

자료: 저자 작성.

2_대중국 도시외교 시사점

1)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주요 특징

도시외교는 ‘국제경쟁력 제고’, ‘정책·경험 공유’, ‘공동문제 해결’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 관료가 초국가 행위자인 국제기구부터 여러 국가 내 행위자까지 관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수행하는 외교 형태이다([그림 4-1] 참조).⁷¹⁾ 외교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존,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국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도시외교 기본구조와 구성요소

자료: 이민규, 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p.68.

지방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젠다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슈, 분야, 목적 등에 따라 ‘전문화’된 외교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는 신외교(new diplomacy)의 주요 형태인 도시외교 역시 신외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멀티-전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표 4-3] 참조). 특히, 외교 어젠다의 ‘수평적 확장’(extended horizontally)과 ‘깊어지고 넓어진’ 특징으로 인해 전문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⁷²⁾ 다르게 표현하면, 핵심 어젠다를 규정하고 전문성 기반의 세분화된 외교를 수

71) 이민규, 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pp.34~37.

72) Rothschild, E., 1995, “What is Security?”, *Daedalus*, 124(3), p.55; Tarry, S., 1999, “‘Deeping’ and ‘Widening’: An Analysis of Security Definitions in the 1990s”, *Journal of Military and Strategic Studies*, 2(1), pp.1~13.

행하였을 때 효율성이 증가하고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그림 4-2] 참조).⁷³⁾

[표 4-3] 신외교 행위 주체, 분야 그리고 성질별 특징

| 구분 | 주요 특징 |
|-------|---|
| 행위 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다층화, 종적 권한 분산 • 부서 간 횡적 업무 분장, 수장 및 대사의 전문화 |
|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와 다른 문제 간 무경계 •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간 무경계 • 상위정치와 하위정치 간 무경계 |
| 성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이익과 공동이익 추구 • 중·장기적 목표 실현 • 관계 구축 중심 |

자료: 이민규, 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p.28.



[그림 4-2] 도시외교 메커니즘

자료: 이민규, 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p.71.

73) 이민규, 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pp.38~47.

2)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추진 방향과 외교 형태

무너진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대중국 도시외교의 추진동력을 재차 얻기 위해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로서 이슈별로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으로 전문화된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두 가지 관점에서 6대 어젠다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 대중국 ‘평화구축’ 공공외교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⁷⁴⁾ 한중 양국 간 ‘반중 정서’를 일으킨 외교·안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높은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북한(핵), 영토 그리고 통일 관련 문제들이 한중 양국만의 이슈가 아닌 미중 패권 경쟁과 직결된 전략적·이념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화구축’ 도시 간 국제기구 활동을 중심으로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시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중국 도시를 포함한 도시 연합을 구축하는 정책 추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대중국 다자 내 양자 연합 외교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둘째, ‘경제·식량’ 역시 ‘기대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다. 중국이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력을 도구화하고, 미중 기술경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는 등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부흥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⁷⁵⁾ 즉, ‘경제·식량’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어젠다로 서울시는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경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중국 경제외교 강화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⁷⁶⁾

셋째, ‘환경’은 한중 양국이 모두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로 ‘관계 구축’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대중국 환경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는 시민들의 실제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으로 문제 해결을 통해서만 대중국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단순 교류와 논의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한중 간 환경 문제를

74) 구체적인 방안은 이민규·박은현, 2021,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서울: 서울연구원 참고.

75)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규, 2020, 「중국의 유럽 선진국 대상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참고.

76) 중국의 내수 중심 경제발전 정책과 소비시장 특징에 대해서는 이민규, 2022, “중국 소비시장 구조적 변화의 사회경제적 요인: 소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중관계연구」, 8권 3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참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 형태로 다자 네트워크(즉 '도시 간 국제기구') 기반 다자외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정 국가와 지역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비전통안보 이슈인 만큼, 그리고 중국 정부가 '생태문명'(生态文明) 건설이라는 관련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자 내 양자 혹은 다자 내 소다자(서울시 대 중국 도시) 형태의 환경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주도의 서울시 대 중국 친선·우호협력도시 혹은 서울시 대 중국 도시를 포함한 다른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 네트워크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겠다.



[그림 4-3] 6대 어젠다별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추진 방향과 외교 형태

자료: 저자 작성.

넷째, '보건·의료' 역시 다자협력이 필수적인 비전통안보 이슈이다. 비전통안보 이슈는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전통안보 이슈 대비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원지와 책임론 이슈가 불거지는 등 미중 패권 경쟁 영역이 확대되면서 갈등 이슈로 변모하게 된다. 이런 국제정치적인 영향과 함께 전염병 만연 시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혐오 현상이 '반중 정서'에 설상가상이 되면서 양국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다.⁷⁷⁾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염병 같은 경우는

위기관리가 그 어느 비전통안보 이슈보다 중요하다. 양·다자 형태의 상시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인권’은 도시 간 국제기구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이지만,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한중관계에서 ‘회피’해 왔던 이슈이다. 또한, 상이한 정치체제를 상호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수교와 교류·협력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정책을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양국의 인권 증진과 상호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교류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을 핵심 어젠다로 하는 도시 간 국제기구를 한중 지방정부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여섯째, ‘문화’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가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하지만, 대부분 ‘홍보’ 중심의 행사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민간에서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고, ‘사이버 민족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의 주체가 민간으로 확대된 만큼, 그리고 상호이해의 대상자가 양국 도시의 시민인 만큼 서울시는 대중국 ‘정부 주도의 시민외교’(state led citizen diplomacy)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77) 구체적인 방안은 이민규·박은현, 2020,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발전현황과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pp.88~91 참고.

참고문헌

- 김경혜, 2011, “국내 중국학관련전공 대학생의 중국·중국인에 대한 인식 -중국유학 경험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32집, pp.214~230,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김선재, 2022, “국방: 긴장된 외부환경 속에서 일구어낸 성과, 그리고 도전”,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오산: 다해.
- 김수한·표나리, 2022, “사회문화: 한중의 교차하는 역사·문화와 충돌하는 민족주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오산: 다해.
- 김한권, 2022, “한중 외교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p.35~78,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 송지연, 2020, “사드(THAD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6권 3호, pp.133~16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오병수, 2017, “역사교류”,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25년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동률, 2017, “정치외교”,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25년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민규, 2020, 『중국의 유럽 선진국 대상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 이민규, 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 이민규, 2020,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선 한중관계”, 이희옥·강수정 책임편집,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한·중 학계의 시각』,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이민규, 2022, “정치외교: 짙어진 미중관계 종속화와 ‘구동화이’ 접근 필요”,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오산: 다해.
- 이민규, 2022, “중국 소비시장 구조적 변화의 사회경제적 요인: 소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중관계 연구』, 8권 3호, pp.141~167,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이민규, 2023, “무너진 기대심리: 한국인의 반중 정서 요인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21호, pp.177~218,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이민규·박은현, 2020,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발전현황과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이민규·박은현, 2021, 『한중관계 30년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 이민규·박은현, 2021,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서울: 서울연구원.
- 이성우, 2022, “사건계수자료(GDELT)를 활용한 한·중 양자관계 역학 분석”, 「아태연구」, 29권 3호, pp.37~75,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이육연, 2022, “한중 수교 30년 문화갈등: 양상과 전개 과정, 극복 과제”,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p.181~20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 이희옥, 2020, “한중수교 25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이희옥·강수정 책임편집,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한·중 학계의 시각」,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이희정, 2022, “미중갈등과 한중관계 분석(2011-2020)-GDELT 빅데이터 기반 시계열 분석-”, 「중국학연구」, 99집, pp.135~158, 중국학연구회.
- 임규섭, 2022, “중국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 사이버대학교 중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20권 3호, pp.98~123, 한중사회과학학회.
- 정재호, 201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재호, 2021, 「생존의 기로: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환우, 2022, “한중 경제통상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p.109~14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 조영남, 2022, “한·중관계 30년의 분석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pp.1~3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 주장환, 2011,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마늘에서 자동차까지……한·중 간 경제적 마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정재호 편저,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Boulding, K. E., 1956, *The Imag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oulding, K. E., 1959,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2), pp.120~131.
- Cho, Y. and J. Jeong, 2008, “China’s Soft Power: Discussions, Resources, and Prospects”, *Asian Survey*, 48(3), pp.453~472.
- Chung, J., 2009, “China’s ‘Soft’ Clash with South Korea: The History War and Beyond”, *Asian Survey*, 49(3), pp.468~483.
- Cottam, M. L., 1985, “The Impact of Psychological Images on International Bargaining: The Case of Mexican Natural Gas”, *Political Psychology*, 6(3), pp.413~440.
- Gill, B. and Y. Huang, 2006, “Sources and Limits of Chinese ‘soft power’”,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48(2), pp.17~36.

Herrmann, R. K. et al., 1997,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3), pp.403~433.

Huang, M. and Yun-han Chu, 2015, "The Sway of Geopolitic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Identity: Why are Some Asians More Favorable toward China's Rise than Other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4(93), pp.421~441.

Kaplowitz, N., 1990, "National Self-Image, Perception of Enemies, and Conflict Strategies: Psychopolitical Dimen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Psychology*, 11(1), pp.39~82.

Kim, T., 2008, "An Emerging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Beijing and Seoul? Myths and Realitie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22(2), pp.97~121.

Lee, M. and Y. Hao, 2018, "China's Unsuccessful Charm Offensive: How South Koreans have Viewed the Rise of China Over the Past Decad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7(114), pp.877~879.

Rothschild, E., 1995, "What is Security?", *Daedalus*, 124(3), pp.867~886.

Schafer, M., 1997, "Images and Policy Preferences", *Political Psychology*, 18(4), pp.813~829.

Tarry, S., 1999, "'Deeping' and 'Widening': An Analysis of Security Definitions in the 1990s", *Journal of Military and Strategic Studies*, 2(1), pp.1~13.

Welsh, B. and A. Chang, 2015, "Choosing China: Public Perceptions of 'China as a model'",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4(93), pp.442~456.

Xie, T. and Benjamin I. Page, 2013, "What Affects China's National Image? A Cross-national Stud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2(83), pp.850~867.

李熙玉, 2015, "韩中公共外交与人文纽带",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第03期, pp.28~33.

뉴스타운, 2013.6.26., "한중 정상회담 기대된다 74.4%",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94>

부산일보, 2021.2.15.,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1509313882290>

스트레이트 뉴스, 2022.5.11.,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사드 추가배치, 찬성 48.2% vs 반대 41.4%",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88>

- 시사IN, 2021.6.17.,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 조선일보, 2017.7.7., “[갤럽 조사]사드 찬성 여론 최대치 기록…찬성 57% 반대 2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1097.html
- 중앙일보, 2006.9.7., “[Joins풍향계] ‘동북공정에 강력히 대처하라’ 63.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41266#home>
- 참세상, 2022.8.17., “10명 중 6명 ‘코로나19 이후 혐오 표현 늘어’…‘사회적 양극화’ 때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32>
- 쿠키뉴스, 2020.2.26.,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 여론조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중국인 입국금지”,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2260038>
- 폴리뉴스, 2016.10.13., “[리얼미터] 불법 중국어선 ‘무력 대응61.3% vs 외교적 대응33.7%’”,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90238>
- 한국일보, 2021.6.14., “‘한국인, 日 가장 혐오’통념 깨진다…2030세대 ‘中’이 더 싫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2670?did=NA>
- JTBC 뉴스, 2013.11.27., “[여론조사]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따르지 않아야’ 87.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84694
- JTBC 뉴스, 2017.3.8., “[JTBC 여론조사] ‘사드보복 조치에 정부 대응 못하고 있다’ 82.4%”,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34791
- SBS NEWS, 2022.8.18., “[여론조사] 중국 반발하는 사드 운용 어떻게?…‘정상화해야 한다’ 55.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65056
- <https://hflib.kr/#/search/detail/184625?offset=1>(동북아역사자료센터 홈페이지)
-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서울대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79>(한국갤럽 홈페이지)
- <https://office.kbs.co.kr/tongil/archives/category/unification-broadcasting-publications/unity-consciousness-search>(KBS 통일방송연구 홈페이지)
- <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Google Trends 홈페이지)
-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Search.naver>(NAVER DataLab 홈페이지)
-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base/>(Pew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 <http://www.tuiir.tsinghua.edu.cn/kycg/zwgxsj.htm>(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 홈페이지)

Korean's Expectations and Negative Views of China: Implications on Seoul's City Diplomacy Strategy Toward China

Min-gyu Le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2,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strategic relationship” supported by close economic cooperation and people-to-people exchange despite their opposing political regim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grown to about 301.5 billion dollars in 2021 from nearly 6.4 billion dollars in 1992, a 47-time increase. In addition, the number of visitors reached all-time high in 2016, standing at about 12.84 million. Going beyond the political cooperation through regular high-level meetings, the bilat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have been exponentially increased and expanded to society, culture and other areas. However, despite a significant increase in exchange and cooperation, Korea's negative views of China have become so severe that ‘anti-China sentiment’ is now considered a social issue. A survey by Pew Research Center found that favorability of China in Korea decreased by 44.0%p, from 66.0% in 2002 to 22.0% in 2021. Korean experts in Korea-China relations are expressing great concerns about how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Most dominant opinion is that the bilateral relationship has already become vulnerable before it achieves qualitative growth and internal stability due to external changes, such as US-China power competition and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The problem lies in the significant disparity between reality and people's views of the Korea-China relationship, which remains substantial despite the presence of negative opinions. Surprisingly, according to a study, it turned out tha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Korea-China relationship index and favorable views of China in Korea. The Korea-China peace index based on GDELT has not shown any significant change since 1992. Moreover, Furthermore, the data displayed that Korea's peace index towards China was higher than China's peace index towards Korea.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ns' views of China from the two perspectives: expectations and anti-China sentiment. Maj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s' favorability of China is moving downward in general despite recurrent rises and falls. According to a survey by Pew Research Center, there were big falls in favorability of 28%p and 39%p from 2002 to 2010 and from 2015 to 2021, respectively. As of 2020, Koreans' favorability of China was much lower than that of America and even lower than that of Russia.

Second, Koreans have started to recognize China as a country that they need to be wary of, not to compete with. A study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howed that the rate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China is a country to compete with decreased from 46.4% in 2007 to 23.0% in 2021, while the rate of respondents who consider China as a country to be wary of increased from 31.0% to 51.8% in the same period. Notably, the only country among four world powers that Koreans see as a cooperative partner was the United 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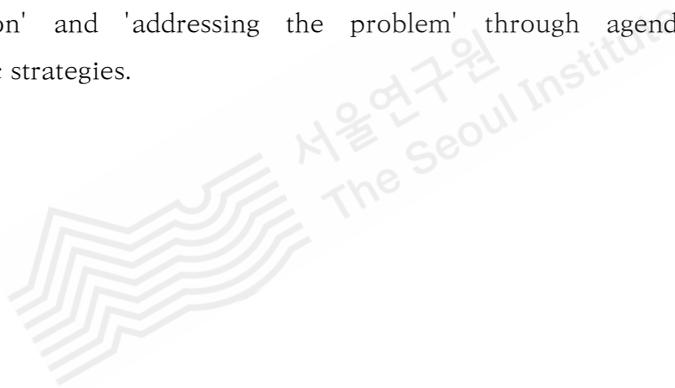
Third, Koreans expected China to serve as a mediator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furthermore in achieving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is expectation failed and even turned negative after a series of events occurred since 2010. Most critical events attributed to a fall in favorability were the Cheonan Sinking and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China's North Korea-leaning response to these events proved that Koreans' expectations that its leadership in the six-party talks will be exercised in the real world were just a "wishful thinking." A decrease in favorability from 61.0%

in 2015 to 22.0% in 2021 was mainly attributed to the deployment of THAAD defense system, but other issues, such as illegal fishing and physical violence of Chinese fishing vessels, declaration of the CADIZ overlapping with Jeodo Island, entering KADIZ without notice and maritime conflicts, also had a negative impact.

Fourth, Korea's opinion about political regime, including a development model issue, and economic development is quite conflicting. The impact of an economic issue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Korea's negative views of China was negligible before China imposed economic retaliation on Korea in response to its THAAD deployment. However, Korea has shown a highly negative sentiment toward China's dictatorial government and development model. Koreans do not trust Chinese leadership and think that China's development model, so called "Beijing Consensus," is not well matched with Korea. Also, there are prevailing concerns in Korea about China's human rights policies in Hongkong's democracy movement and human rights abuses in Tibet and Xinjiang. Koreans have high expectations o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while having very negative opinions about its environmental policies. They, in particular, have a great interest in global warming and fine dust issue. In this situation, the outbreak of COVID-19 gave a fatal blow to the worsening favorability of China in Korea. However, it was showed that Koreans still have great expectations on the emergence of China. More than half Koreans answered that they think China will be a superpower of the world, even stronger than the United States.

Fifth, strong nationalism of the two countries and Chinese cultural renaissance policies made their historical homogeneity a factor of conflict, not a catalyst of cooperation. China's Northeast Project carried out in 2003 and 2006 was a representative historic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is assessed to be the "first turning poin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As a result, the favorability of China plummeted to 41.0% in 2009. This issue was settled with verbal consent between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but cultural identity, devolvement and global culture standard issues repeatedly occurring every year keep reminding of the past.

Last, most of bilater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remain unsolved. More concerning is that these pending issues possibly reoccur or become a bigger new conflict combined with China's emergence and consequential power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We have witnessed that over the past 30 years, similar issues have been repeatedly making the negative views of China in Korea deteriorated. Expectations Koreans once had in 1992 disappeared and negative views escalated into a social issue, "anti-China sentiment." The prevalence of this sentiment will hamper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the Korean government might lose its diplomatic policy capacity to deal with China. To address this proble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needs to adjust its diplomatic strategy and the direction of its six-city diplomacy agenda. This adjustment should consider both 'what Koreans want' (expectations) and 'what they do not want' (anti-China sentiment). The SMG should prioritize between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addressing the problem' through agenda-specific diplomatic strategies.



Contents

01 Koreans' Favorability of China and Views of Korea–China Relations

- 1_Favorability of China and Relative Awareness
- 2_Views of Korea–China Relations and Relative Awareness

02 Koreans' Favorability of China and Views of Korea–China Relations

- 1_Favorability of China and Relative Awareness
- 2_Views of Korea–China Relations and Relative Awareness

03 Koreans' Expectations for China and Emotional Factors of Unfavorable Sentiment toward China

- 1_Major Diplomatic and Security Events and Their Impacts on Views of China
- 2_Major Political and Economic Events and Their Impacts on Views of China
- 3_Major Society and Cultural Events and Their Impacts on Views of China

04 Policy Implications on Seoul's City Diplomacy Strategy toward China

- 1_Complex Imag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s' Expectations and Disappointments towards China
- 2_Implications on City Diplomacy Strategy toward China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와 반중 정서
: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시사점

서울연 2022-BR-25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769-1 93340 6,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